

Journal of Military History
2022, No. 123, pp.1-57
<https://doi.org/10.29212/mh.2022..123.1>
Printed in the Republic of Korea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고종성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학예연구원

- 목 차
1. 머리말
 2.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경과와 현황
 3.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검토
 4. 맺음말

초 록 본 연구는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수습한 전사자 유해와 유품을 6·25전쟁사 연구에 필요한 하나의 사료(史料)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6·25전쟁 중 적과 싸우다 사망한 전사자(戰死者)는 기존의 6·25전쟁사 연구에서는 주목받지 못하다가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된 전사자 유해발굴과

* 본 연구는 고종성,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활용」, 국민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21.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에 대해 조언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맞물리면서 처음으로 그 성격을 조명받기 시작했다. 한국군은 전사자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경험과 기록 체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하였다. 따라서 현 상황에서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공개된 정보는 6·25전쟁 전사자의 존재를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핵심 자료이다.

경상북도 지역은 한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의 지연전을 거쳐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전을 수행하며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낸 곳이다. 이러한 경북의 주요 전투지역에서 한국군 전사자 유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문경, 풍기, 안동, 의성, 영천, 칠곡(다부동), 영덕, 포항 등 기존 전투사에 기록된 격전지에서 상당수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포항과 영천 지역의 경우 기존에 알려졌던 전사자 규모보다 더 많은 수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어 기존의 6·25전쟁 전투사를 재확인하는 새로운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

6·25전쟁 전사자의 유품은 말 그대로 전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류품을 뜻한다. 그 종류에 따라 화기류, 탄약류, 피복류, 군화류, 장구류, 개인유품 등으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유품들은 종류별로 특징을 분석하여 전사자의 국적, 즉 피아(彼我)식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위와 같이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파악한 전사자 유해와 유품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사료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단순히 추모의 대상으로만 해석되어왔던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주제어 : 6·25전쟁, 한국전쟁, 한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유해, 유품,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원고투고일 : 2022. 1. 7, 심사수정일 : 2022. 5. 19, 게재확정일 : 2022. 6. 2)

1. 머리말

대한민국은 1948년 정부수립 이후 1950년 6·25전쟁¹⁾을 맞게 되었다. 이 가운데 한국군²⁾은 전쟁 기간 동안 137,899명으로 추산되는 전사자(戰死者)가 발생하였다.³⁾ 전사자는 사전적인 의미로 전쟁터에서 적과 싸우다가 죽은 사람을 통칭한다.⁴⁾ 따라서 6·25전쟁 전사자는 6·25전쟁에 참전하였다가 전투 중 사망한 장병(將兵)들을 뜻한다. 그동안 6·25전쟁사에서 전투를 실질적으로 수행한 참전 장병들에 대한 연구가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다가 2000년대를 전후하여 6·25전쟁 포로에 관한 연구가 활성화되었다.⁵⁾ 하지만

- 1) 1950년부터 1953년까지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을 어떻게 명명하느냐의 문제는 전쟁의 기원과 책임소재 등을 규명하는 연구자의 시각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런 측면에서 상당수의 연구자는 전쟁의 국제전적, 내전적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 학술적 용어로 ‘한국전쟁’을 선택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부는 1993년 처음 제정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법률 제17119호, 2020.3.24 시행, 일부개정]’을 통해 ‘6·25전쟁’을 법률적 용어로 채택하였다. 더욱이 해당 법률을 근거로 ‘6·25전쟁 전사자’를 정의하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법률 제15045호, 2017.11.28 시행, 일부개정]’이 제정된 바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루고자 하는 연구의 정의를 확립하기 위해 ‘6·25전쟁’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자 한다.
- 2) ‘한국군’이라는 용어는 1948년 9월 대한민국 국군이 창설된 이후의 조직을 가리키는 데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 ‘한국군’은 해군, 공군, 해병대 등의 사료적 한계로 인하여 그 범위를 육군으로 한정하였다. 노영기, 「1948-50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고한빈, 「한국전쟁 이전(1946-50) 한국군 군사교범의 성격」,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7.
- 3) 박동찬, 『통계로 보는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200쪽.
- 4)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 5) 6·25전쟁 포로에 관한 최근의 연구는 다음과 같다. 조성훈, 『한국전쟁과 포로』, 선인, 2010; 이상호, 「한국전쟁기 미군의 공산포로 ‘미국화 교육」, 『역사와 현실』 제 78호, 2010; 전갑생, 「88인의 포로, 떠난 자와 돌아온 자 남에서 반공투사가 된 귀환 포로들」, 『민족21』 제117호, 2010; 이선우, 「한국 전쟁기 중립국 선택 포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12; 김보영, 「한국전쟁포로협상과 중국군 포로의 선택」, 『사학연구』 제123호, 2016; 윤성준, 「한국전쟁기 북한의 점령

참전 장병 중에서도 특히 국가의 명령에 따라 전장(戰場)에서 전사(戰死)한 ‘전사자’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6·25전쟁 당시 한국군은 전사자를 어떻게 처리하고 예우할 것인지에 대한 경험 없이 전쟁을 수행하였다.⁶⁾ 더욱이 기존의 6·25전쟁사 연구에서는 작전 과정 중 전사자가 발생하였을 때 유해를 어떻게 수습했는지조차 제대로 언급하지 않고 있다.⁷⁾ 결국 전사자들은 6·25전쟁에서 가장 소외된 존재이며, 6·25전쟁 전사자 연구는 6·25전쟁사 연구에서 가장 미진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비록 죽은 자는 목소리를 낼 수 없지만 가장 치열하게 전쟁을 경험했고 그 수가 상당하다는 점에서 6·25전쟁 전사자는 전쟁의 중요한 주체로서 주목되어야 한다. 그들이 전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동시에 가장 큰 피해를 본 당사자였다는 사실이 사회적으로 환기되어야 한다.

6·25전쟁 전사자에 대한 국내적 관심은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육군본부와 민관 합동으로 추진된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사자 유해발굴을 한시적으로 실시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이하 전사자 유해발굴)은 처음에는 인류학적인 관점에서 접근되기 시작했지만 이때부터 이미 국가와 시민사회의 관계를 설정하는 주요한 상징으로 보는 한편, 국민의 사회소속감을 보여주는 중요한 역사적 사례로 해석되었다.⁸⁾ 또한 전사자 유해발굴의 심층적인 연구를 위해서는 인류학적

정책과 조선인민의용군의 동원 : 미군 포로심문보고서를 중심으로, 『한국근현대사 연구』 제89호, 2019.

6) 강인철, 『전쟁과 희생 :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27쪽.
7) 이상호, 「베트남전쟁 파병 국군 전사자 현황과 국내 언론 보도」, 『역사와 현실』 제116호, 2020, 105쪽.
8)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에 관해 인류학적 관점으로 바라본 초기 연구는 다음과 같다. 박선주, 「6.25 전사자 유해발굴조사 : 6.25 전사자 유해의 인류학적 조사-2000~2002년도 발굴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6호, 2002; 「6.25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보』 제33호, 2006; 노용석,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산지니, 2018.

지식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접근방법이 필요함을 인식하기 시작했다.⁹⁾ 이렇듯 6·25전쟁 전사자의 존재는 처음부터 전사자 유해발굴과 맞물리면서 그 성격을 조명받기 시작했다.

한편, 비슷한 시기에 유해발굴과는 별개로 국가 중심의 전사자 추모를 비판적으로 바라본 연구 또한 같이 이뤄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국가가 전사자의 숭배를 통해 개인의 희생을 강요했다고 지적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전사자에 대한 추모시설 조성이 국가의 정치적 목적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보았다.¹⁰⁾

위와 같은 연구들은 6·25전쟁 전사자의 존재를 밝히는 데 도움을 주었고 전후 세대가 전사자를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지 그 방향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상의 연구들은 사회적인 추모 혹은 인류학적 관점에서 전사자 문제를 규명한 것으로 전사자에 대해 실증적인 접근을 한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6·25전쟁 발발 이후 전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전사자들이 어떤 군사적 합의에 근거해서 수습되었는지, 전사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에서 얼마나 발생하였는지, 이러한 전사자 문제가 6·25전쟁사 측면에서 어떻게 검토되어야 하는지를 실질적으로 고찰하지는 못하였다. 이러한 한계점에 때문에 전사자 수습 과정이 배제된 전사자 추모 연구는 전쟁의 참혹함에 대한 대중의 의식을 왜곡할 수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었다.¹¹⁾ 전쟁사(戰爭史)는 군사사(軍事史)의 일환으로서¹²⁾ 전쟁의 전술적 수행 즉, 전투를 중심으로 전쟁의 본질과 성격을 규명한다고 볼 수 있

9) 박선주, 「6.25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보』 제33호, 2006, 70쪽.

10) 전쟁 전사자에 대한 숭배 그리고 국가 주도의 추모시설 조성 등을 비판적으로 바라본 연구들은 다음과 같다. 다카하시 데쓰야, 『국가와 희생』, 책과 함께, 2008; 전진성 외 『기억과 전쟁 : 미화와 추모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하상복, 『죽은자의 정치학』, 모티브북, 2014.

11) 이상호, 앞의 논문, 2020, 105쪽.

12) 서양에서는 군사사(Military History)가 전쟁사(History of Warfare)보다 더 폭넓고 보편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정토웅, 「군사사 연구방법론(Ⅰ)」, 『군사』 제24호, 1992, 10쪽.

다.¹³⁾ 따라서 6·25전쟁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전사자를 6·25전쟁사 속에서 다루려는 시도가 필요했다. 이에 따라 전쟁사적 측면에서 6·25전쟁 전사자 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한 사례도 있었다. 김성보와 양영조의 연구가 여기에 해당한다.

김성보는 6·25전쟁 50주년 당시 이루어졌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지켜보면서 6·25전쟁사의 새로운 연구 가능성과 과제 등을 제시하였다.¹⁴⁾ 그는 종전의 6·25전쟁사가 전투 과정만을 나열하는 전투사 혹은 특정 인물의 정치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전쟁을 수행하는 장병들의 실상을 파악하지 않고는 전쟁의 전체 실상에 접근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단순히 수치적인 통계에서 벗어나 장병들의 출신 배경, 생각과 정서, 군내에서의 경험, 처우, 삶의 변화 등 군인들의 내면을 이해하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새로운 연구방법론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6·25전쟁사 측면에서 전사자를 연구할 수 있을 것이라 내다보았다. 김성보는 특히 전사자의 유품에 주목하여 전사자 유해 주변에 남겨져 있는 전쟁의 흔적들을 조사하는 연구의 병행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¹⁵⁾

한편, 양영조는 더 나아가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실증적으로 접근하기 시작하였다. 그는 6·25전쟁 격전지와 전사자 유해의 지역 분포를 비교하고 이를 기존의 전투사 연구와 연결하여 해석하였다.¹⁶⁾ 양영조는 2000년대부터 2016년까지 남한지역에서 발굴된

13) 이종하, 『한국군사사 연구』, 충남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20-25쪽; 방종관, 「전쟁사 연구에서 전투사의 성격과 연구방법 : 황성전투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군사학과 석사학위 논문, 2004, 9-14쪽.

14) 김성보, 「한국전쟁기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전쟁사 연구의 과제」, 『중원문화연구총서』 제6호, 2002.

15) 위의 논문, 2002, 25-27쪽.

16) 양영조, 「6·25전쟁과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전사자 9,645구를 대상으로 지역별 분포를 분석해 볼 때 강원지역이 5,600구, 경북지역이 2,415구, 경기지역이 1,848구순으로 가장 많음을 지적하며 이러한 전사자 유해의 분포는 기존 6·25전쟁 전투사를 비교적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았다. 또한 6·25전쟁 당시 한국군이 전사자 처리를 제대로 수행할 여유가 없었으며 전쟁 이후에도 정부와 군이 기록의 미비로 인해 전사자 기록을 명확하게 정리하거나 관리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전사자 연구를 전쟁사 측면에서 더 면밀하게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¹⁷⁾

위의 연구들에서도 지적했듯이 6·25전쟁 당시 전사자의 현황과 전사자 수습에 관련된 기록은 전쟁 중에 제대로 관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전사자에 관한 실증적인 정보를 얻는 것은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결국, 전사자 유해발굴의 현황 자료는 6·25전쟁 전사자의 실황을 파악할 수 있는 매우 핵심적인 자료라고 볼 수 있다.

현재 파악할 수 있는 전사자 유해발굴의 구체적인 자료로는 첫 번째로 전사자 유해의 지역별 발굴현황이 있으며, 두 번째로 전사자 유해와 동반 출토된 전사자 유품(遺品)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각 지역에서 발굴한 전사자의 유해와 유품을 하나의 역사적 사료(史料)로써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보다 더 실증적으로 접근해보고자 한다. 우선, 6·25전쟁 전사자가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수습되었는지, 전사자의 수습이 전쟁 발발 직후부터 1950년대를 거쳐 어떻게 현재의 전사자 유해발굴에 이르렀는지 그 전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와 유품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6·25전쟁사 안에서 어떠한 사료적 가치를 갖고 활용될 수 있는지 고찰해보고자 한다.

17) 앞의 글, 239-241쪽.

첫 번째 요소는 양영조의 시도에서 알 수 있듯이 전사자 유해의 지역별 분포 현황과 기존 전투사에서 보고된 지역별 전사자 추정치를 비교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양영조는 전국 단위에서 전사자의 분포 현황을 거시적으로 파악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를 세부적으로 확장하기 위해 6·25전쟁 직후 상당한 전사자가 발생한 경상북도 지역을 선정하였다. 따라서 경북의 주요 전투지역에서 전사자 유해가 정확히 얼마나 발굴되었는지 살펴보고 기존 전투사와 비교할 때 어떠한 공통점과 특이점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두 번째 요소로 그동안 다루지지 않았던 6·25전쟁 전사자의 유품 자료를 종류별로 고찰해보고 이 자료들을 사료로써 활용할 수 있는지 그 가치와 한계에 대해서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6·25전쟁 전사자의 수습과 유해발굴의 전개와 관련하여 대한민국 육군과 합동참모본부의 자료를 참고하였다.¹⁸⁾ 특히 전사자 유해발굴의 전담 기구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의 자료를 폭넓게 참고하였다.¹⁹⁾ 현대에 이르러 본격적인 전쟁사 연구는 6·25전쟁 이후 군에서 시작되었다.²⁰⁾ 국방부는 작전일지와 지도 등의 1차 사료를 기반으로 6·25전쟁사를 정리하여 오랫동안 전쟁사 연구를 주도해왔다.²¹⁾ 따라서 기존의 6·25전쟁사는 1967년에서 1980년에 걸쳐 간행된 『한국전쟁사』²²⁾를 보완한 『6·25전쟁사』²³⁾를 중심에 놓고, 2000년에서 2020년까지 발굴한 6·25전쟁 전사자의 지역별 분포 현황 자료들을 함께 비교하면서 살펴보고자

18)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8집, 2001-2010.

1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유해발굴 20년사』, 2021.

20) 방종관, 앞의 논문, 2004, 8쪽.

21)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제32호, 2015, 337쪽.

22) 국방부 전사편찬위원회, 『한국전쟁사』 1-11권, 1967-1978.

2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1권, 2003-2013.

한다.²⁴⁾ 전사자 유품 자료 역시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발간한 유품자료집²⁵⁾을 참고하되,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에서 공개한 특이 유품 목록을 함께 살펴보았다.²⁶⁾ 또한 6·25전쟁 생존 장병들의 증언이 담긴 구술자료²⁷⁾와 더불어 6·25전쟁 전사자와 관련 있는 역사박물관의 발간자료 역시 참고하였다.²⁸⁾

2.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의 경과와 현황

가. 6·25전쟁의 발발과 전사자의 수습

6·25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북한군²⁹⁾의 기습 남침으로 발생했기 때문에³⁰⁾ 전쟁 발발 직후부터 한국군 전사자가 속출하기 시작하였다. 개전 초기 한국군은 전사자에 대한 독립적인 전담 조직도 없이

-
- 24)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 유해소재 지도(DMZ/남한지역)』, 200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 2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유품자료집』 Vol.2, 2018; 『6·25 전사자 유품자료집』 Vol.3, 2020.
- 2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2011년 전사자 특이유품 목록(www.withcountry.mil.kr), 2022.01.06. 검색.
- 27) 김귀옥 외, 『한국전쟁 이야기 집성』 1·2권, (주)박이정, 2017.
- 28) 한양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개교 72주년 기념 특별전 : 한국인과 인장』, 2011; 수원박물관,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 해방공간 수원, 그 뜨거운 함성』, 201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2017; 『박물관 근현대자료의 등록과 관리』, 2018; 『6·25전쟁 70주년 특별전 : 녹슨 철망을 거두고』, 2020.
- 29) 정식명칭은 조선인민군(朝鮮人民軍)이다. 1948년 2월에 창설되었다. 김선호, 『조선인민군 : 북한 무력의 형성과 유일체제의 기원』, 한양대학교 출판부, 2020, 422쪽. 본 연구에서는 혼동을 줄이기 위해 북한군으로 통칭한다.
- 30)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2권 : 북한의 전면남침과 초기 방어전투』, 2005, 3쪽;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638쪽.

육군본부 인사국이 전사자 수습을 담당하였다. 한국군은 6·25전쟁 발발 이전에 전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수습하여 장충단³¹⁾공원에 안치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함으로써 종전의 임시적인 전사자 수습체계마저 무너지게 되었다.³²⁾ 6·25전쟁 발발 이후 각 부대가 붕괴되고 재편성이 반복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부대는 부대원의 명단을 유지하는 것조차도 어려웠다. 장병들 각자가 얼굴을 익히기도 전에 전사한 경우가 부지기수였다. 따라서 한국군은 대량으로 발생한 전사자의 시신을 체계적으로 수습할 만한 여유가 없었다. 옆에서 싸우던 전우가 쓰러지면 소부대 단위로 약식 절차에 따라 임시로 매장하거나 그럴 여유마저 없으면 동료의 시신을 그대로 남겨둔 채 후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³³⁾ 이와 같은 전황은 6·25전쟁 생존 장병의 구술자료 <A-1>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A-1>

“... 아 그 전방에 있을 때 이루 말할 수 없지. 전방에서 여러 번 겪은 건 말할 수도 없구. 그냥 일개 소대가 오다가 이렇게 앉아서 휴식, 잠깐 휴식할 동안이든 포가 옆에 떨어져가지구 그냥. 그니깐 일개 소대 한 사십 명 되는 사람이 다 기절허구 다 튀지. 안 튀는 사람이 없는 거야. 그르른 여기 다리가 그름 이제 멀쩡, 이제 귀가 멍멍 허잖아

31) 장충단(獎忠壇)은 대한제국 시기 고종이 당시 국가를 위해 순국한 충신, 열사(烈士)들을 위해 1900년부터 단(壇)을 조성하여 제사지내던 제향(祭享) 공간으로 현재 현충원(顯忠院)의 성격이 지닌다. 일제 강점기에 공원화되었다가 해방 이후 순국선열들을 기리는 추모공간으로 장충단을 재건하려는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49년부터 이승만 정부는 정부수립을 전후하여 공산세력과 싸우다 죽은 전사자를 장충단에서 추모하기 시작했다. 김수자, 「제1공화국 시기 장충단공원의 정체성의 변형 과정」, 『한국문화연구』 제34호, 2018, 280-291쪽.

32) 강인철, 앞의 책, 2019, 371-374쪽.

3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66쪽.

요? 나부텨두 어딜 다쳤는지 모르는 거야. 정신이 돌아오는 길에 딱 보르는 다리 하나 부러진 놈이 이십메타 삼십메타 튀어가서 자빠져있구. 그럼 여기 파편에 골이 맞아가지구 심 꼴딱꼴딱 쉬는대로다가 골이 꼴락꼴락 요렇게 나오고 그냥 정말 참 전우들이 그런 현상. 그래서 그거를 지역이 중등부센데 어디쯤 오는데 그 사과밭 거길 밑에 파구서 우리가 물어주구 그런 거, 그렇게두 해서 오고 그랬어요 그냥, 증말 그 뭐 이루 말할 수 없었지 ...”³⁴⁾

1950년 8월이 되면서 한국군과 유엔군³⁵⁾은 7월 한 달 동안 계속됐던 지연전을 멈추고 낙동강 일대의 방어선을 형성했다. 그때부터 한국군과 유엔군은 북한군을 상대로 치열한 방어전을 전개하였으나 전사자의 체계적인 수습이 어려운 것은 마찬가지였다. 1950년 8월에 한국군 제1사단이 수행했던 다부동 전투에서 전사한 한국군은 2,300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³⁶⁾ 여기에 낙동강 방어선을 공격했던 북한군 전사자도 발생하였으므로 다부동 일대는 피아(彼我)를 구분하기 힘들 정도로 많은 전사자가 발생하였다. 피해 규모가 커지자 육군본부에서도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1950년 8월 말 한국군 제1사단이 다부동 진지를 미군에게 인계하고 이동하게 되었을 때, 미군 측은 전사자 시신을 치워주지 않으면 진지 인수를 거부하겠다고 버틸 만큼 전사자 수습은 시급한 문제로 대두되었다.³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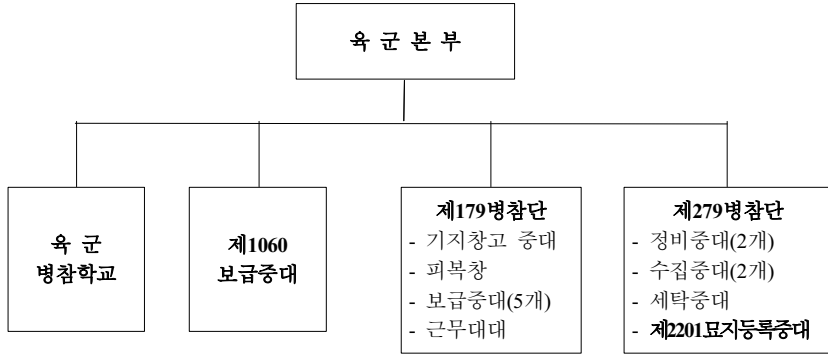
34) 임정환 구술, 박현숙 외, 「모든 바깥 전쟁을 섭렵하다」, 『한국전쟁 이야기 집성』 1권, (주)박이정, 2017, 34-35쪽.

35) 세계평화의 안정과 유지를 위해 군사적 제재를 가할 필요가 있을 때,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구성되는 비(非)상비군이다. 국제연합군이라고도 한다. 1950년 6·25전쟁 당시 처음 조직되었다. 이는 국제연합 헌장이 본래 정한 유엔군이 아니라,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그 권고에 응한 가맹국의 군사행동이였다. 『한국군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2005.

3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67쪽.

37)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지구촌, 1999, 78쪽.

<표 1> 1951년 병참부대 조직³⁸⁾



이에 육군본부는 6·25전쟁 전사자 수습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낙동강 방어 전투가 거의 종반전에 접어든 1950년 9월 5일 전사자의 수습을 전담하는 ‘묘지등록대’를 창설하였다. 당시 육군본부의 병참조직은 직할부대들과 1개의 병참단으로 편성되어 있었지만 몇 차례의 개편을 거치면서 1951년 2월에는 제179병참단과 제279병참단으로 편성되었다. 이때 묘지등록대 역시 <표 1>과 같이 ‘제2201묘지등록중대’로 명칭이 개칭되면서 제279병참단 예하 부대로 소속이 변경되었다.³⁹⁾

<표 2> 전사자 영현관리 부대 창설 현황⁴⁰⁾

부대	창설 시기	활동 범위	부대 위치
제81영현중대	1951.03.25	육군 전체	부산
제82영현중대	1953.02.20	서부 지역	서울
제83영현중대	1953.05.15	동부 지역	춘천

38)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60쪽.

3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68쪽.

40) 이남우, 「전시체제의 한국군 상·장례 절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장례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11쪽.

이 묘지등록중대는 <표 2>와 같이 1951년 봄부터 약 2년에 걸쳐 3개의 영현중대로 확대 개편되었다. 1951년 3월에 기존의 묘지등록중대가 제81영현중대로 명칭이 바뀐 데 이어, 1953년 2월에는 제82영현중대, 같은 해 5월에는 제83영현중대가 각각 창설되었다. 개별 영현중대는 각 4개의 영현소대로 구성되었는데 각 소대는 소대본부, 수집 및 후송반, 유품 및 등록반을 두었다.⁴¹⁾ 그러나 묘지등록중대가 영현중대로 확대되었다고 해서 6·25전쟁 전사자 수습체계가 곧바로 정착되지는 않았다. 묘지등록대-영현중대가 창설된 이후 사단 단위로 전사자 유해를 화장하여 본가에 호송하거나 부산 동래의 범어사, 금정사 등에 안치했지만 그 수치가 정확히 얼마나 되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기록이 없는 실정이다.⁴²⁾

나. 정전협정 이후 전사자의 수습과 송환

6·25전쟁은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되면서 휴전상태가 되었다. 정전협정의 핵심 의제는 군사분계선의 설정과 포로송환 문제였지만 전사자의 수습과 송환에 관한 문제도 포함되어 있었다.⁴³⁾ <B-1>의 정전협정 문서 제13항 ‘ㄱ’목에 전사자의 송환에 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B-1>

매장(埋葬)지점이 있고 분묘(墳墓)가 확실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 판명된 경우에는 본 정전협정이 효력을 발생한 후, 일정한 기한에 그의 군사 통제하에 있는 한국 지역의 상대방의 분묘등록인원이 들어오는 것을 허가하여 이러한

41) 강인철, 앞의 책, 2019, 375쪽.

4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69쪽.

4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발굴 20년사』, 2021, 37쪽.

분묘소재지에 가서 해당 측의 이미 죽은 전쟁포로를 포함한 죽은 군사 인원의 시체를 발굴하고 또 반출하여 가도록 한다. 상기(上記)사업을 진행하는 구체적 방법과 기한은 군사정전위원회가 이를 결정한다. 적대 쌍방 사령관들은 상대방의 죽은 군사 인원의 매장지점에 관계되는 얻을 수 있는 일체 재료를 상대방에게 제공한다.⁴⁴⁾

위와 같이 정전협정 제13항 ‘ㄴ’목에 따라 1954년 8월 17일 군사정전위원회 제47차 본 회의에서 「쌍방 군사인원 시체 인도, 인수에 관한 행정상 세목의 양해」를 비준했다. 이 행정상 세목의 양해에 따라 1954년 9월 1일부터 양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10월 30일까지 두 달 동안 유엔군 측 전사자 4,091구와 북한군과 중공군⁴⁵⁾측 전사자 13,528구가 일괄 상호 송환되었다.⁴⁶⁾ 상호 간 유해의 일괄 송환이 완료된 이후에는 <B-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정전협정의 부속문서인 「행정상세목의 양해서」 제20항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조항만이 유효하게 되었다. 이 조항이 현재까지 6·25전쟁 전사자 유해 송환의 근거가 되고 있다.⁴⁷⁾

44) 경무대 소장 「휴전협정 원문」, 1953, 7쪽. (김보영, 『전쟁과 휴전 : 휴전회담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471쪽에서 재인용)

45) 중국 공산당의 정규 군대를 뜻한다. 중국과 북한에서 쓰이는 정식 명칭은 중국인민지원군(中國人民志願軍)이다. 1950년 10월 8일 중국인민해방군 동북변방군을 기반으로 창설되었다. 박영실, 『중국인민지원군과 북·중 관계』, 선인, 2012, 91쪽. 본 연구에서는 중국 국민당의 국민정부(중화민국)와 구분하기 위해 중국인민지원군이나 중국군 대신 중공군으로 통칭한다.

46) 박중섭, 「한국전쟁 사망군인 유해발굴의 인도법적 의의」, 『인도법논총』 제26호, 2006, 242-243쪽.

47)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72쪽.

<B-2>

본 양해가 폐지된 이후 어느 자기 측 지역 내에서 상대방에 속하는 ‘군사인원의 시체’를 발견하는 경우 쌍방 비서장을 통하여 이러한 시체의 인도·인수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⁴⁸⁾

이와 같은 정전협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6·25전쟁 전사자 수습과 송환 문제는 남북갈등 등 정치적인 이유로 크게 진척되지 못하였다.⁴⁹⁾ 장기간 소강상태에 있던 6·25전쟁 전사자 수습 문제는 1985년 8월 28일 유엔군사령부 군사정전위원회에서 6·25전쟁 당시 실종된 유엔군의 생사 확인 및 전사자 송환을 요청하는 유엔군사령부의 서한에 대해 북한 측이 적극적으로 찾아보겠다고 회신함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⁵⁰⁾ 1986년 1월에는 북한이 700여 구의 유해를 이미 단독으로 발굴했다면서 유엔군사령부가 아닌 미국 정부와 직접 교섭을 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이에 1988년 베이징에서 시작된 북·미간 참사관급 접촉에서 미군 유해송환 문제 처음 논의되기 시작하였고 1993년 8월에는 유엔군사령부

48)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2001, 172쪽.

49) 1954년 유해송환이 완료된 이후 여전히 북한 지역에 한국군과 미군을 포함한 유엔군측 포로 또는 유해가 남아있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1976년, 미 하원 동남아 실종자 특별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8,177건의 미군 유해가 완전히 해명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유엔군 전체는 약 10,200건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부는 1955년부터 지속적으로 포로 및 유해의 송환을 요구하였다. 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 및 유해 송환 정책」, 『군사』 제35호, 1997, 223-224쪽.

5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73쪽. 미국은 베트남전쟁 이후 베트남과 관계전진과정에서 실종 미군(Missing in Action)의 생사확인 및 유해송환을 중요한 조건으로 내걸었던 것과 같이 미군 유해송환에 중요성을 부여해 왔다. 특히 미국 재향군인회와 전쟁인미망인협회 등의 지속적인 요청에 의해 인도적 차원에서 미군 유해송환 협상에 관심을 기울였다. 반면 북한은 미군 유해송환 문제를 고리로 하여 포괄적인 대미 협상 창구 확보 및 경제적 보상이라는 대가를 추구하였다. 박종철, 「미·북 군사회담과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문제연구』, 제5권, 1996, 79-80쪽.

와 북한군 사이에 「미군 유해에 관한 합의서」가 체결되었다.⁵¹⁾ 뒤 이어 1996년 1월 하와이 미 육군 중앙유해감식소(일명 실하이, CILHI Central Identification Laboratory, Hawaii)에서 미국과 북한 간 6·25전쟁 전사자 공동발굴 및 보상에 관한 협상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⁵²⁾ 양측은 긴밀한 협상을 거쳐 같은 해 5월 뉴욕에서 개최된 2차 협상에서 마침내 합의에 도달했다. 그 결과, 1996년 7월 평안북도 운산지역에서 최초로 북·미 6·25전쟁 전사자 공동발굴이 시작되었다.⁵³⁾

<표 3> KWIP(Korean War Identification Project/K208, JRO, K55) 개요⁵⁴⁾

KWIP	K208	1990-1994년 동안 북한이 단독으로 평안북도 벽동 및 운산군, 함경북도 장진읍, 황해북도 수안군 등에서 발굴하여 미국 DPAA로 넘겨준 유해
	JRO	Joint Recovery Operation. 1996-2005년 동안 미국과 북한이 공동으로 함경북도 장진읍 및 신흥리, 평안북도 운산군 및 구장읍, 평안북도 계천시 등에서 발굴한 유해
	K55	2018년 1차 북·미 정상회담 이후 미국으로 송환된 유해, 북한 단독 발굴

51) 서주석, 앞의 논문, 1997, 224-225쪽.

52) 미 육군 중앙유해감식소(CILHI)는 1973년 동남아시아에서 실종된 미군의 유해발굴을 목적으로 타일랜드에서 창설되었던 부대를 1976년 하와이로 이전하면서 편성되었다. 2003년 합동특수임무부대 (JTF-FA)와 통합해 합동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로 개칭되었다. 2016년에는 미국 국방성 전쟁포로실종자 사무소(DPMO), 미 공군 생명과학연구소 등의 기관을 통합하여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으로 확대 개편되어 워싱턴 D.C.에 본부를 두고 출범하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85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DPAA 소개(www.withcountry.mil.kr). 2022.01.06. 검색.

53)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집, 2001, 173-174쪽.

54) 전소영, 「국방부 유해발굴감식의 성과와 의미 : 최근 사업을 중심으로」, 『제63회 전국역사학대회 : 고고학부 발표 '고고학상의 갈등과 통합』, 한국고고학회, 2020, 46쪽. KWIP(Korean War Identification Project)는 한국과 미국의 공동감식 프로젝트로써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국 국방부 전쟁포로/실종자 확인국(DPAA)이 공동으로 북한에서 송환된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정밀감식한 프로젝트이다.

북한은 1990년부터 자체적으로 수습한 전사자 유해를 미국에 송환하기 시작했고 1996년부터는 미국과 북한의 공동유해발굴이 시작되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 문제로 협상이 중단된 2005년까지 미국은 북한지역에서 발굴된 222구의 미군 유해를 송환받았다.⁵⁵⁾ 2007년에는 북한을 방문한 리처드슨(William B. Richardson) 당시 뉴멕시코주 지사를 통해 6구의 유해를 추가로 송환받았다.⁵⁶⁾ 또한 2018년 제1차 북·미 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북한이 단독 발굴한 유해를 다시 송환받기도 하였다.⁵⁷⁾ 이 시기에 북한에서 미국으로 송환된 전사자 중 일부는 <표 3>과 같이 한·미 공동감식 프로젝트(KWIP/Korean War Identification Project)를 통해 147구가 한국군 전사자로 판명되어 2020년, 대한민국 정부가 6·25전쟁 70주년 기념식에 맞추어 송환받았다.⁵⁸⁾

55) 미국은 북한과 협상을 통해 발굴 기간과 횟수, 발굴 작업 인원을 기준으로 상당한 금액의 보상금을 매년 책정하여 북한에 지급하였다.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 회편람』 제7집, 2006, 182쪽.

56)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회편람』 제8집, 2010, 224쪽.

57) 「공동성명 전문」, 《중앙일보》, 2018년 6월 13일자

4. 미국과 북한은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 The United States and the DPRK commit to recovering POW/MIA remains, including the immediate repatriation of those already identified. (<https://www.joongang.co.kr/article/22708859>), 2022.01.05 검색

58) “이날 봉환된 유해는 북한의 개천시·운산군, 장진호 일대에서 1990~94년 발굴된 유해 208개 상자와 북·미 정상회담 후 2018년 미국으로 송환된 유해 55개 상자 중 두 차례 한·미 공동 감식을 통해 국군 유해로 판정된 147구다. 한·미 공동 감식에 의해 이미 세 차례에 걸쳐 92구의 유해가 송환됐다.” 『6·25 영웅들 70년 만에 귀환』, 《중앙일보》, 2020년 6월 25일자 종합 1면.

<표 4> 1959년-1967년 6·25전쟁 전사자 유해수습 현황⁵⁹⁾

발굴 시기	발굴부대(육군본부)	지 역	수습 구수
1959.06	영현중대	경북 영천 일대	300여 구
1959.11	영현중대	경북 영천 일대	300여 구
1960.02	영현중대	경북 영천·신평 일대	300여 구
1960.10	제81영현등록중대	경기 의정부 호원리	59구
1965.07	제81영현등록중대	충북 음성, 경기 여주, 전북 이리	47구
1967.12	제81영현등록중대	경북 포항, 영일 일대	15구

한편, 1950년대 영현중대 창설과 함께 추진된 국내의 전사자 수습은 대부분 각급 부대와 지역 주민에 의해 임시 매장되었거나 화장된 전사자에 집중되었을 뿐, 실제 전투 현장에 방치되어 있던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관리하기 위한 근본적인 조치를 취하지는 못하였다. <표 4>와 같이 1959년부터 1967년까지 육군본부를 중심으로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사자 유해 일부를 수습하였으며, 1990년에 결성된 ‘다부동전투전우회’는 1997년까지 총 8번의 조사 활동을 통해 전사자 유해 2구를 수습하기도 하였다.⁶⁰⁾ 하지만 이때까지의 전사자 수습은 세부적으로 수립된 계획이 아닌 지역 주민과 6·25전쟁 전사자 장병 유가족, 전우회 등의 진정에 의한 것이었다.

다. 국가 책임의 전사자 유해발굴 전개

국내에서 전우회와 전사자 유가족들을 중심으로 6·25전쟁 전사자의 수습을 호소하던 시기에 미국에서도 그동안 ‘잊혀진 전쟁

5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발굴 20년사』, 2021, 39쪽.

60)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80-81쪽.

(forgotten war)⁶¹⁾으로 인식되었던 6·25전쟁이 재조명되기 시작했다. 1995년 미국 정부는 자체적으로 6·25전쟁 50주년 기념행사를 기획하면서 한국 정부에 협조를 요청해왔다. 이에 정부는 1998년 건군(建軍) 50주년 기념행사 종료 후 행사위원회를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을 준비하는 조직으로 전환했다. 기념사업준비위원회는 6·25전쟁이 발생한 날부터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을 기준으로 2000년 6월 25일부터 2003년 7월 27일까지 3년간의 기간을 정해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⁶²⁾ 이에 따라 국방부와 국가보훈처의 주도로 1998년 국무총리실 산하 자문기구인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위원회’가 구성되었고, 국방부는 관련 사업의 시행을 위해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을 설치했다.⁶³⁾

기념사업단은 세부적인 사업을 선정하고자 참전단체와 예비역 단체 등에 적합한 사업제한을 공모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총 93건의 사업을 선정하였는데 이 중 국방부는 참전용사의 명예선양사업의 일환으로 참전전우 찾기, 전사망자 유가족 찾기, 참전용사 명예선양, 전쟁영웅 현양 행사, 전사자 유해발굴 및 안장 사업 등을 선정하였다.⁶⁴⁾ 이처럼 전사자 유해발굴이 범정부 사업으로 채택된 직접적인 이유는 공모를 통한 선정이었지만 그 배경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960년대부터 전사자 유가족 및 전우회 등의 유해 수습에 관한 지속적인 요청이 있었다. 특히 1990년대 이뤄진 북·미 양자 간의 전사자 합동 유해발굴 및 송환 협상 역시 사업 선정에 상당한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인다.⁶⁵⁾

61) 김태우, 앞의 논문, 2015, 32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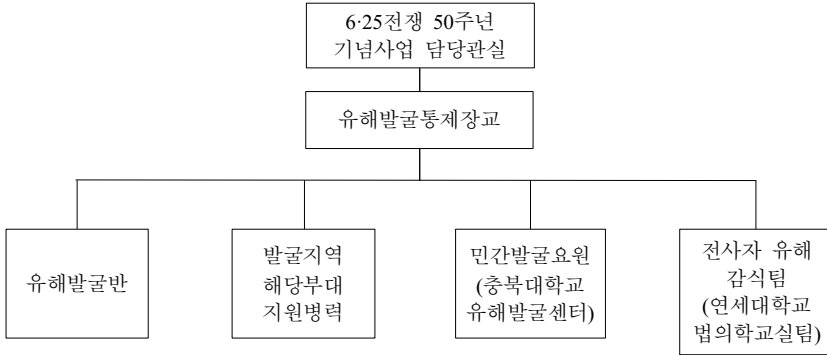
6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82쪽.

63) 위의 책, 14쪽.

64) 위의 책, 83쪽.

65) 대한민국 정부는 ‘유엔군 유해 처리에 대한 기본 방침(1996.02.08.)을 발표하며 미군 유해송환 절차는 북·미 양자가 아닌 군사정전위원회를 통해 처리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광진·김명진, 『6·25 당시의 국군포로/실종자 유해 송환

<표 5> 육군본부 전사자 유해발굴 수행기구⁶⁶⁾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은 기념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그동안 전투 현장에 남겨진 6·25전쟁 전사자들의 유해를 체계적으로 수습하기로 결정하고 전사자 유해발굴을 주요 사업 가운데 하나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표 5>와 같이 육군본부에 담당 부서를 임시 편성한 후 유해수습 및 분석 등을 담당하는 민간전문가들이 포함된 유해발굴조직을 구성하고, 지역별로 발굴 현장에서 유해발굴반을 지원할 대대급 부대를 지정하였다.⁶⁷⁾ 그 결과, 첫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2000년 4월 3일에 6·25전쟁 당시 가장 치열했던 격전지 중 하나인 경상북도 칠곡군 가산면 소재의 다부동에서 시작될 수 있었다.⁶⁸⁾

이렇게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전사자

추진대책』, 한국국방연구원 연구보고서, 1996, 81-82쪽.(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 및 유해 송환 정책」, 『군사』 제35호, 1997, 224쪽에서 재인용)

6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87쪽.

67) 육군본부와 민간전문가와 합동으로 진행한 유해발굴은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 지속-영구 사업으로 지정되면서 2006년까지 지속되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124쪽.

68) 위의 책, 15쪽.

유해발굴사업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범정부 차원에서 6·25전쟁 전사자를 수습하는 유해발굴사업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었다. 그러나 당초 기간과 예산에 많은 제한을 두고 추진한 기념사업이었기 때문에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상세한 사전 검토가 제대로 선행되지 못했다는 한계가 존재했다. 실제로 당시에는 1960년대에 육군본부가 유해 수습을 했던 사례가 있었다는 사실도 알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 참고자료 역시 확보하지 못한 상태였다. 따라서 전사자 발굴 및 신원확인을 위한 경험과 지식 또한 절대적으로 부족했다. 결국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단에서 수립한 초기의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계획은 생존 장병의 증언과 주민 및 전사자 유가족 제보를 기초로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는 차원의 단순 발굴에 중점을 둘 수밖에 없었다.⁶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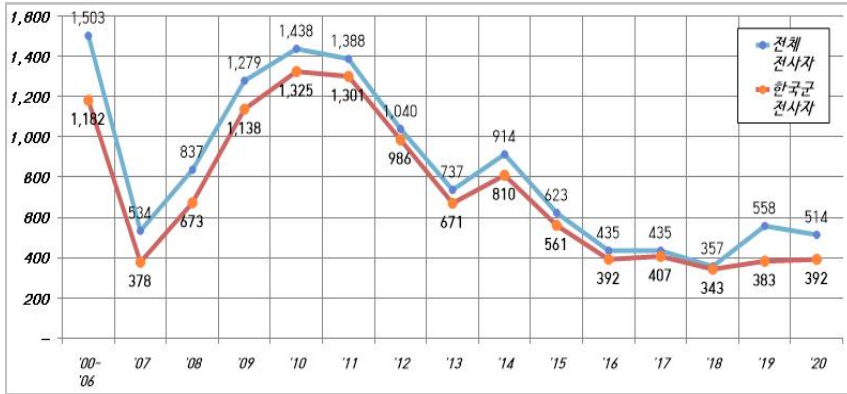
하지만 전사자 유해발굴은 유해가 본격적으로 발굴되고 일부 한국군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성과가 나타나자 대외적으로 높은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와 같은 국민적 관심은 유해발굴사업을 한시적으로 마칠 수 없다는 공감대로 확대되면서 정부는 2003년 7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이 종료된 이후에도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⁷⁰⁾ 이에 육군본부는 자체적인 조직과 예산만으로 지속적인 사업을 진행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2003년 7월 미국의 경우와 같이 독자적으로 전사자 유해발굴과 신원확인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부대 창설을 목표로 「6·25전사자 유해발굴 업무 5개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국방부에 건의하였다. 그 결과, 2007년 1월 1일부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전담하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이 창설되었다.⁷¹⁾

6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90쪽.

70) 위의 책, 15-16쪽.

71) 위의 책, 161-167쪽.

<그래프 1> 2000-2020년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⁷²⁾



국유단은 창설과 함께 영구적인 국가사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법령 제정을 추진한 결과 2008년 3월 21일 법률 제8924호로 「6·25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⁷³⁾이 제정되면서 같은 해 6월 20일 대통령령 제20832호로 법률에 대한 시행령⁷⁴⁾도 제정되었다. 2011년에는 미국 합동전쟁포로/실종자 확인사령부(JPAC)와 유해발굴 상호교류 및 유해발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는데 여기서 한·미 양측은 북한지역 및 비무장지대(DMZ) 내 전사자 유해발굴에 대한 상호 협력을 약속했다.⁷⁵⁾ 2014년부터는 중국과 협

7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부록> 참조

73) 해당 법률은 2017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45호, 2017.11.28. 시행, 일부개정]

74) 해당 시행령은 2019년에 일부 개정되었다.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2호, 2019.4.2. 시행, 일부개정]

75) 「대한민국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과 미 합중국 합동 전쟁포로 및 실종자 확인 사령부간의 상호교류 및 유해발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 제2절 공동 고려사항, 201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13년의 기록』, 2013, 326-327쪽에서 재인용)

의를 거쳐 그동안 국내에서 발굴한 중공군 전사자 유해를 중국으로 송환하기 시작하였으며⁷⁶⁾, 2016년부터는 미국이 과거 북한 지역에서 발굴한 전사자 유해 중 정밀감식을 통해 한국군 전사자로 다시 판명된 유해와 국내에서 발굴된 미군 전사자 간의 상호 송환이 시작되었다.⁷⁷⁾ 2018년 판문점선언 이후에는 9·19 남북군사합의가 체결되면서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공동유해발굴이 합의되었다.⁷⁸⁾ 이에 따라 국유단이 2019년부터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전사자 유해발굴을 수행하고 있다. 비록 공동유해발굴에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북한 측이 전사자 유해발굴에 직접적으로 참여하지는 않았다.⁷⁹⁾ 하지만 화살머리고지에서 시작된 유해발굴은 정전협정 이후 최초로 남북합의에 의해 비무장지대 내에서 이뤄지는 전사자 유해발굴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의가 있다.

국유단은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전국에서 총 12,592구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발굴하였으며 이중 한국군 전사자 유해의 숫자는 10,942구에 달한다.⁸⁰⁾ 이는 현재 국방부에서 추산하고 있는

76) 「중공군 유해 437구, 61년 만에 고향으로」, 《중앙일보》, 2014년 3월 29일자, 종합 9면.

77) 「6·25 한국·유엔 전사자 유해 봉환」, 《중앙일보》, 2016년 4월 29일자 종합 16면.

78)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2-③ 쌍방은 비무장지대 내에서 시범적 남북공동 유해발굴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2018.9.19.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2022.01.05 검색.

(<http://www.korea.kr/news/cultureColumnView.do?newsId=148865808>).

79) “군은 당초 백마고지 일대의 전사자 유해발굴 작업을 일정 기간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한바 있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에 이어 김일성 생일(15일)과 전반기 한미 연합훈련을 계기로 도발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중략)···DMZ 일대에서의 유해발굴 작업은 2018년 9·19 군사합의를 계기로 2019년 시작됐다. 합의 당시 남북은 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공동 유해발굴 작업을 하기로 했지만, 남북관계 냉각으로 북측이 호응하지 않으면서 남측 단독으로 발굴작업을 하고 있다.” 「北 도발 우려로 연기 검토한 백마고지 6·25전사자 발굴 재개」, 《동아일보》, 2022년 4월 11일자.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20411/112825397/1>)

80) 해당 통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창설 이전인 2000년부터 2006년에 발굴된 전사자 유해를 모두 동일한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으로 보고 합산한 통계이다.

한국군 전사자 137,899명에 비해서는 한참 모자란 숫자이다. 6·25 전쟁 생존 장병, 전사자 유가족 등 6·25전쟁 세대의 고령화와 6·25전쟁 전투지역의 다변화로 인해 전사자 유해발굴 여건이 악화되어가고 있는 상태이다.⁸¹⁾ 실제로 <그래프 1>을 보면 연도별 전사자 유해발굴의 추이를 파악할 수가 있는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점을 찍던 전사자 유해의 숫자가 이후 크게 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2019년 발굴한 전사자 유해 전체 558구 중 강원도 화살머리고지에서만 360여 구가 발굴된 점⁸²⁾으로 미루어 볼 때, 비무장지대와 북한지역에 상당수의 전사자 유해가 산재해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 전사자 유해발굴 및 유품의 사료적 검토

가. 경북지역 전투사와 유해발굴 현황의 비교

경상북도 지역은 한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의 지연전을 거쳐 유엔군과 연합하여 낙동강 전선을 구축하고 6·25전쟁 발발 이후 처음으로 1달 이상 방어전을 수행한 곳이다.⁸³⁾ 경북지역에서는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578구의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6,515구가 발굴된 강원지역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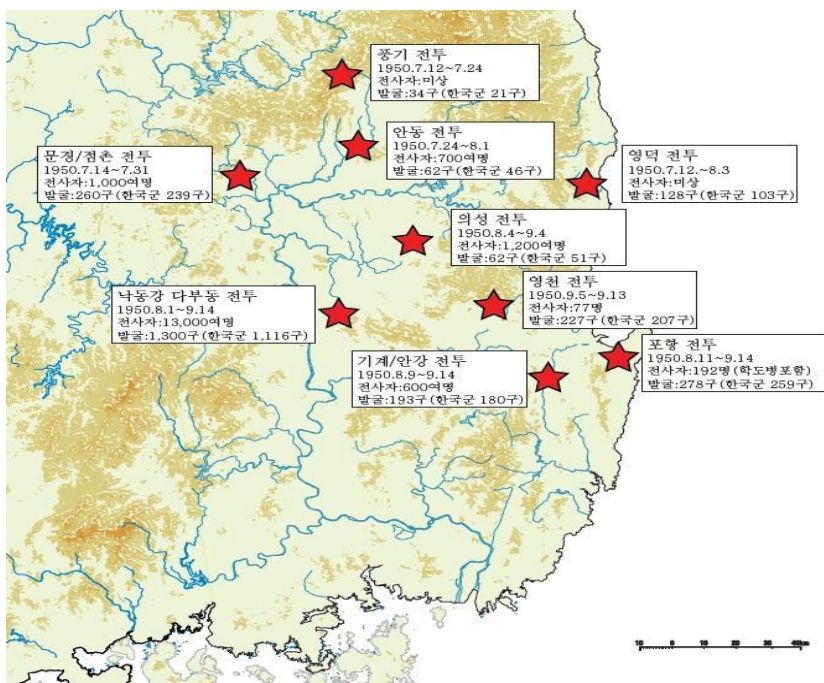
81)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유해를 발굴한 한국군 전사자 중 신원확인이 되어 유가족의 품으로 귀환한 전사자는 총 157명이다. 2021년에는 추가로 24명의 전사자 신원이 확인되었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6·25 전사자 신원확인 현황(www.withcountry.mil.kr), 2021.12.31. 기준.

82) 「화살머리고지 영웅 70년 만의 귀환 이뤄내」, 《국방일보》, 2020년 9월 17일자 (<http://kookbang.dema.mil.kr>).

83)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권 :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전투』, 2008, 3-10쪽.

다.⁸⁴⁾ 더욱이 6·25전쟁 발발부터 정전까지 지속적으로 전투가 벌어졌던 강원지역에 비해 경북지역의 전투기간은 1950년 7월부터 9월 중순까지로 매우 짧은 것을 감안한다면 짧은 기간 동안 격전 속에서 상당한 수의 전사자가 발생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경북지역의 주요 전투지역에서 보고된 전사자 추정치와 현재까지 발굴된 전사자 분포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지도 1> 1950년 당시 경상북도 6·25전쟁 격전지와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⁸⁵⁾



84)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6·25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별 통계 현황 (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85) 본 지도는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권 :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전투』, 2008; 『6·25전쟁사 5권 : 낙동강선 방어전투』, 2008; 『6·25전쟁 유해 소재 지도(DMZ/남한지역)』, 200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경북지역 유해발굴 현황(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다.

한국군은 서울과 대전을 지나 빠른 속도로 대구를 향해 내려오는 북한군의 남진 속도를 문경-풍기-영주-안동 등에서 지연전을 통해 현격히 늦춰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방어선을 구축할 수 있었다.⁸⁶⁾ 북한군은 전체 13개 사단 중 11개에 이르는 사단을 동원하여 칠곡-의성-영덕 등 남쪽으로 향하는 거의 모든 경로를 통해 공격을 시도하였으나 한국군은 유엔군과 같이 침입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다. 특히 칠곡 다부동 전투를 통해 낙동강 방어선을 사수한 것이 결정적인 승리요인이었다. 한편, 북한군은 의성과 영덕을 지나 영천과 경주, 포항 일대로 진출, 낙동강을 우회하여 동해안 방면에서 시차를 두고 남하를 시도하였으나 이 또한 한국군이 저지하여 인천상륙작전 이후 반격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었다.⁸⁷⁾

위에서 언급하였듯 경상북도 지역은 한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의 지연전을 거쳐 낙동강 방어전투와 동해안 일대의 동부지역 전투를 거치면서 6·25전쟁 초반부 가장 치열한 방어전을 수행한 곳이다. 경상북도의 각 지역에서의 동시다발적으로 전투가 발생했으므로 그 수치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전사자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경북지역의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전사자 유해 발굴 지역별 현황을 비교하여 검토한 결과, <지도 1>과 같이 기존 전투사에 기록된 주요 전투지역에서 수십 구에서 수천 구의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격전지로 알려졌던 지역들에서 발굴되는 전사자 유해의 분포는 기존 6·25전쟁의 전투사를 비교적 상세히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영천과 포항전투의 경우 기존 전투사에서 보고된 한국군 전사자 수가 각각 77명과 192명인 것에 비해⁸⁸⁾ 2000년부터 2020년까지의 유해발굴 결과 영

86)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4권 : 금강-소백산맥선 지연전투』, 2008, 274-275쪽.

87)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5권 : 낙동강선 방어전투』, 2008, 758-760쪽.

88) 위의 책, 464쪽, 778-783쪽.

천지역에서 207구, 포항지역에서 259구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다.⁸⁹⁾ 이는 경북지역의 피해 상황이 기존 전투사에서 파악했던 것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경북지역은 현재까지도 계속 전사자 유해발굴이 이뤄지는 상태임을 감안할 때 <지도 1>과 같이 경북 주요 전투지역에서 나타나는 전사자 유해발굴의 현황은 기존 6·25전쟁 전투사를 입증해 줄 수 있는 또 하나의 근거가 되는 유의미한 수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이 각 지역의 전사자 유해발굴의 수치를 기존 전투사와 상호 비교하여 검토한다면 6·25전쟁 전투사의 실질적인 하나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경북지역의 6·25전쟁 전사자 분포 현황이 기존 전투사를 반영하는 흐름을 보일지라도 경상북도 이외의 다른 지역이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일례로 경상남도 창녕의 경우, 기존 전투사에 의하면 미군 제24사단이 방어를 담당했던 지역이었지만 해당 지역에서는 2020년까지 총 212구의 한국군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다.⁹⁰⁾ 이처럼 기존 전투사와 실제 유해발굴 사례 간에 차이점이 발생하는 부분은 향후 타 전투지역에 관한 추가 연구를 통해 6·25전쟁 전투사를 면밀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나. 전사자 유품의 사료적 가치 검토

6·25전쟁 전사자 유품은 말 그대로 전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류품을 뜻한다. 전사자 유품은 크게 전사자 유해와 동반 출토되는 유해유품과 발굴지역에서 유품만 단독으로 출토되는 지역유품으로

8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지역별 유해발굴 현황(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90) 양영조, 「6·25전쟁과 국군 전사자 유해발굴」,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17, 240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6·25 전사자지역별 유해발굴 현황(www.withcountry.mil.kr) 2020.12.31. 기준.

나눌 수 있다. 전사자 유해와 함께 수습된 유해유품은 전사자의 국가 즉, 피아(彼我)식별을 위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된다.⁹¹⁾ 또한 유해와 같이 출토되지 않은 지역유품이라고 할지라도 주요 전투지역에서 발굴된 유품 자체가 6·25전쟁 72주년을 맞은 현 상황에서는 당시의 전투상황을 판단하고 시대상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하나의 역사적 유산(遺産)으로써 가치를 지닐 수 있다.⁹²⁾ 이러한 유품의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정부는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전사자 유품에 대한 훼손을 금지하도록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특히 전사자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 및 보존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보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⁹³⁾ 전사자 유품은 위 법률의 시행령에 따라 국유단에서 관리하고 있다.⁹⁴⁾ 현재 더 이상 신원확인 및 관계가 없는 유품에 한해서는 국유단 자체적으로 순회 전시를 하거나 전시를 원하는 공공기관에 영구대여하고 있다.⁹⁵⁾

9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34쪽.

92) 문화재청은 6·25전쟁 70주년을 맞아 역사적 가치를 지닌 6·25전쟁 관련 유물을 중요한 근현대 문화재로 인식하고 그 현황을 파악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국방부는 6·25전쟁 관련 군사 문화재의 장기적인 관리를 위해 별도로 군사재(軍史財)를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양영조 외, 『근현대문화유산 6·25전쟁(한국전쟁)분야목록 조사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2020; 김태산·김희동, 「군부대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군사과학논집』 69권 1호, 공군사관학교, 2018.

93)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045호, 2017.11.28. 시행, 일부개정], 제8조-①누구든지 전사자의 유해 또는 유품을 훼손하거나 임의로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④전사자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전사자 유해의 신원확인 및 호국·보훈 관련 교육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94) 6·25 전사자 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2호, 2019.4.2.시행, 일부개정] 제10조 제4항에 따라 전사자 유해와 함께 발굴된 유품은 국방부 장관이 지정하는 유품보관소에 보관한다. 다만, 유품 중 폭발물과 탄약류는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을 관할하는 군 부대장에게 인계한다.

9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34쪽. 여기서 영구대여의 경우, 영구적인 유품의 대여를 의미하지만 소유권은 국방부에 있음을 뜻한다. 하지만 경우에 따라

<표 6>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종류별 분류⁹⁶⁾

6·25전쟁 전사자 유품					
화기류	탄약류	피복류	군화류	장구류	개인유품
· M1소총 · 카빈소총 · 모신나강소총 · PPsh-41 기관단총 등 총기/무기류	· M1탄 · 카빈탄 · 모신나강탄 · TT탄 등 총알/탄약류	· 국가별 야전상의/ 방한복 등 전투복 종류와 단추류	· 국가별 전투화 및 군화류	· 철모 · 버클 · 야전삽 · 반합 · 수통 등 개인 장구류	· 인식표 · 도장 · 만년필 · 라이터 · 훈장, 기장 등 개인유품

현재 전사자 유해발굴을 전담하고 있는 국유단의 유품 분류기준은 <표 6>과 같다. 이번 장에서는 국유단이 발굴한 전사자 유품 자료들에 근거하여 6·25전쟁 전사자 유품 중 대표적인 유품을 종류별로 소개하고 전사자 유품과 피아구분 및 신원확인의 상관관계, 그리고 전사자 유품 자체의 사료적 가치와 한계에 관해서 검토해보고자 한다.

1) 화기류 유품

<표 7> 한국군 전사자 고 류광연 일등상사의 유품 발굴정보⁹⁷⁾

성명	전사일	발굴장소/전투	발굴일	동반 출토유품
류광연	1953. 7.16	강원 철원 내성동리 /흑운도령 금성천 전투	2011. 9.28	카빈 소총, M1 탄피, 카빈 탄피, M1 탄, M1 탄클립, 카빈 탄알집, 수류탄 고리, 계급장, 군장고리, 철모, 대검집, 야삽, 수통, 전화기, 탄띠 조각, 전투화 밑창, 플라스틱 4혈단추, 인식표, 연필, 만년필, 지갑, 약병, 인식표

서 소유권 자체를 대한민국의사박물관 같은 다른 기관에 이관(移管)한 사례도 있다. 대한민국의사박물관, 『박물관 근현대자료의 등록과 관리』, 2018, 11쪽.

96) 해당 표는 국유단이 발간한 유품자료집의 목차와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하였다.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전사자 유품자료집』 Vol.2, 2018; 『6·25전사자 유품자료집』 Vol.3, 2020.

97) 황선익 외, 『국군 유해발굴 관련 전사콘텐츠 구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6, 50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2011년 전사자 특이유품 목록(www.withcountry.mil.kr), 2022.01.06. 검색.

<사진 1> 한국군 전사자 고 류광연 일등상사가 소지했던 카빈 소총⁹⁸⁾

화기류 유품은 전사자가 사용했던 소총, 권총, 기관총 등의 총기류가 주류를 이룬다. 화기류는 6·25전쟁에 참전한 국가별로 여러 종류가 존재하지만, 대표적으로 한국군과 유엔군의 경우 미군이 보급한 M1 Garand Rifle(M1 소총), M1 Carbine (카빈 소총) 등이 주로 6·25전쟁에 사용되었고 북한군과 중공군의 경우 Mosin Nagant M1891/30(모신나강 소총), PPsh-41(슈파킨 기관단총) 등이 주로 쓰였다. 한국군과 북한군의 경우, 광복 직후 일본군이 철수하면서 남기고 간 Japanese Type 38/99 Arisaska(38/99식 아라사카 소총)를 사용한 사례도 확인되었다.⁹⁹⁾ 화기류는 생산 국가가 비교적 정확히 특정되어 있지만, 항상 노획(鹵獲)의 가능성이 있어 단순히 화기류 유품 단독으로는 피아구분의 특징이 어렵다. 하지만 인식표 등 다른 단서로 이미 한국군임을 추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화기류를 같이 소지하였을 때 신원확인에 더 확실한 근거를 줄 수 있다. 일례로 1953년 7월에 전사한 고 류광연 일등상사의 경우, 동반 출토된 인식표를 기반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표 7>의 동반 출토된 유품의 양상으로 볼 때 카빈 소총을 비롯한 전형적인 한국군 소속의 유품을 소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더욱 신속한 신원확인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 류광연 일등상사가 소지하고 있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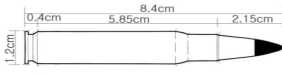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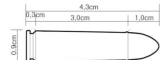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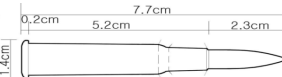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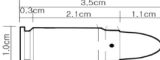

98) 대한민국역사박물관, 『6·25전쟁 70주년 특별전 : 녹슨 철망을 거두고』, 2020, 33쪽.

9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전사자 유품자료집』 Vol.2, 2018, 40-119쪽.

던 카빈 소총은 <사진 1>과 같이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 이관되어 6·25전쟁 70주년 특별전에 활용되기도 하였다.¹⁰⁰⁾

2) 탄약류 유품

<표 8> 6·25전쟁 전사자 유품 중 대표 탄약류 4종¹⁰¹⁾

탄약명	탄약류 전체 규격	탄저부호
M1탄 (.30-06 Springfield)		 생산공장 (U.C. 웨일즈사제) 생산년도 (44: 1944년)
카빈탄 (.30 Carbine)		 생산공장 (U.C. 웨일즈사제) 생산년도 (44: 1944년)
모신나강탄 (Mosin-Nagant)		 생산공장 (17: 소련 17호 공장) 가장자리 (모신나강탄 탄저부호는 가장자리가 비공백으로 표한다.) 생산년도 (28: 1928년)
TT탄 (Tula-Tokarev)		 생산공장 (3: 소련 3호 공장) 생산년도 (52: 1952년)

탄약류 유품은 화기류 유품의 소모품으로써 쉽게 말해 총기류의 탄약들을 뜻한다. 탄약류는 화기류에 따라서 여러 종류가 존재하지만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에서 가장 많이 출토되는 탄약류는 한국군과 유엔군의 경우 M1 소총에 사용되는 M1 탄(.30-06 Springfield)과 카빈 소총에 사용되는 카빈 탄(.30 Carbine)이 대표적이다. 북한군과 중공군의 경우 모신나강 소총에 사용되는 모신나강 탄(Mosin-Nagant) 그

100) 6·25 전사자유해의 발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29672호, 2019.4.2. 시행, 일부개정], 법률 제10조 제4항에 의해 전사자 유해와 동반 출토된 유품의 경우에는 보관이 원칙이므로 타 기관으로의 이관이나 대여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다만 고 류광연 일등상사의 경우, 국유단에서 신원확인 이후 유가족을 통해 유품을 다시 기증(寄贈)받은 다음 이관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10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136-157쪽.

리고 슈파긴 기관단총과 토크레프 권총(Tula Tokarev 33)에 쓰이는 TT 탄(Tula-Tokarev) 등이 주로 출토된다. 탄약류는 화기류와 마찬가지로 규격이 정해져 있어 생산 국가를 특정하기 용이하지만, 탄약류 역시 노획의 가능성이 항상 상존하기 때문에 탄약류 유품 하나만으로는 피아구분 및 신원확인을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탄약류의 경우 <표 8>과 마찬가지로 탄약 밑부분 탄저부(彈底符)에 생산 연도와 생산공장의 정보가 표시되어 있는데 이를 탄저부호(彈底符號/Headstamp)라고 한다. 이 탄저부호를 통해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에서 출토된 탄약류의 생산연도와 생산공장의 정보를 파악하여 해당 지역의 전투사 연구와 전사자의 피아구분에 참고할 수 있다.¹⁰²⁾

3) 피복류 유품

<표 9> 6·25전쟁 당시 미군과 중공군의 대표적 피복류와 단추류¹⁰³⁾

명칭	피복류	단추류
미군 M-1943 야전상의, 야전내피: 유단식 4혈 플라스틱 단추		
중공군 전투복: 갈색 림식 4혈 플라스틱 단추(좌) / 갈색 림식 八一 플라스틱 단추(우)		

6·25전쟁 이전 한국군의 병참 보급품은 다른 분야에 비해서 국내 조달 비중이 높은 편이었다. 특히 피복의 경우를 살펴보면 한국군은 인천에 피복창을 두고 군 피복을 생산하는 한편, 피복창의 생

10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296-299쪽.

103) 위의 책, 166-167쪽, 182쪽.

산량을 초과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민수용 공장에서 조달하고 있었다. 비록 6·25 전쟁 발발 직후 인천 피복창과 서울 보급창을 상실하면서 피복 보급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부산에 피복창을 설치하고 빠르게 피복 생산을 재개하여 1950년 7월 4일이 되면 피복 제조업체가 71개로 증가하고 일일 생산능력도 전투복 3,000착, 전투모 1,000개 등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¹⁰⁴⁾ 6·25전쟁 초기 한국군은 피복류 보급에 어려움을 겪자 미군의 보급에 상당 부분 의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증명하듯 <표 9>을 보면 미군 야전상의와 야전 내피 등에 주로 사용했던 유단식 4형 플라스틱 단추가 실제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에서 상당수 출토되고 있다.¹⁰⁵⁾ 섬유 재질인 피복류 유품의 특성상 땅속에서 자연분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에서 피복류 유품이 유해와 함께 온전하게 동반 출토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하지만 플라스틱 재질의 단추류의 경우, 상당수가 전사자 유해와 함께 동반 출토되므로 향후 한국군을 비롯한 6·25전쟁 참전국의 군 복식에 관한 지속적인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전사자 피아구분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사진 2> 미 육군 M12 방탄조끼

<사진 3> 1953년 1월 22일 파주

(Armor Vest/화살머리고지 발굴 유품)¹⁰⁶⁾ 소(小)노리고지의 한국군 1사단 장병들¹⁰⁷⁾



104)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 1997, 206-207쪽.

105)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161-167쪽.

106) 양영조 외, 『근현대문화유산 6·25 전쟁(한국전쟁)분야 목록화 조사 최종보고서』, 문화재청, 2020, 80쪽.

107) 미국문서기록관리청(NARA) 소장, (사)월드피스자유연합 수집 (국방부 유해발굴감

또한 국유단은 2019년, 강원도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사진 2>와 같이 미 육군 M12 방탄조끼를 발굴하였다. 해당 방탄조끼는 미군이 1951년 5월부터 고지전에 투입되는 병력을 대상으로 일부 보급하기 시작하였으며¹⁰⁸⁾ 이후 1953년 전후로는 한국군 역시 8,400벌을 제공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12 방탄조끼는 실제 사용되었다는 기록만 있었을 뿐, 이번 유해발굴을 통해 최초로 실물이 확인된 사례로서 <사진 3>과 같이 사진자료를 통해 한국군의 실제 사용한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¹⁰⁹⁾

<사진 4> 화살머리고지 출토 방독면¹¹⁰⁾



국유단은 화살머리고지에서 <사진 4>와 같이 중공군이 사용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방독면 또한 발굴하였다. 6·25전쟁 당시 세균전의 발생 여부는 현재까지도 규명 중인 만큼¹¹¹⁾ 유해발굴을 통

식단, 『6·25 전사자유품자료집』 Vol.3(아군), 2020, 226쪽에서 재인용)
108)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유품자료집』 Vol.3(아군), 2020, 222쪽.
109) 양영조 외, 앞의 보고서, 2020, 79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6·25 전사자 유품자료집』 Vol.3(아군), 2020, 227쪽.
110) 최인건 외, 『현대 매장문화재 조사현황』, 『한국고고학회 제6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고고학의 과제와 발전방향 모색, 근현대 고고학의 중요성과 필요성』, 2022, 20-21쪽.
111) 6·25전쟁 당시 세균전 논쟁에 관련된 최근의 연구 동향으로는 전예목, 『6·25 전쟁 시기 ‘세균전’ 설 제기 과정과 내막』, 『군사』 제120호, 2021.을 참고

해 출토된 방독면의 존재는 관련 연구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표적인 유물이다. 따라서 향후 화살머리고지에서 발굴되는 전사자 유품의 추이를 주목할 필요성이 있다.

4) 군화류 유품

<표 10> 6·25전쟁 당시 미군과 중공군의 대표적 군화류와 유품 출토사례¹¹²⁾

명칭	군화	밑창/도면		유품 출토사례
미군 보급용 군화 (Boots, Service, Combat)				
미군 군화 (M1948 Boots)				
중공군 전투화				

한국군의 군화류 역시 피복류와 마찬가지로 6·25전쟁 이전까지는 인천 피복창 등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된다. 6·25전쟁 직후 부산에 다시 피복창을 설치하고 빠르게 피복 생산을 재개 하여 1950년 7월 4일이 되면 피복 제조업체가 71개로 증가하고 일일 생산능력 역시 하루에 혼련화 3,000족 이상을 생산할 수 있게 되었다.¹¹³⁾ 재질이 주로 가죽인 군화는 땅속에 묻힐 때 대부분 자연 분해되므로 군화류 유품의 경우, <표 10>과 같이 대부분 고무 재질인 전투화 밑창

11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196-199쪽, 236-237쪽.

113)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1997, 207쪽.

을 통해 유품의 정보를 파악하고 있다. 전투화 밑창의 무늬와 상표 등을 통해서 전투화의 국적과 종류 등을 파악할 수 있으므로 피아 구분의 한 근거가 될 수 있다.

5) 장구류 유품

<표 11> 한국군 전사자 고 장복동 일병의 유품 발굴정보¹¹⁴⁾

성명	전사일	발굴장소/전투	발굴일	동반 출토유품
장복동	1951.1.10	홍천 현리 /홍천 전투	2006.9.21	철모, M1 탄, 끈, 수통, 각반, 전투화 뒷굽, 전투화 앞창

<사진 5> 한국군 전사자 고 장복동 일병의 수통(좌)과 중공군 수통(우)¹¹⁵⁾



장구류는 군인들에게 보급되었던 공통적인 군장(軍裝) 물품을 뜻하는데 대표적으로 철모, 야전삽, 반합, 수통, 탄띠 등이 있다. 실제 전사자 유해발굴 지역에서는 장구류 결속에 사용하는 군장고리, 탄띠고리 등도 상당수 출토된다.¹¹⁶⁾ 장구류 유품의 경우, 화기류나 탄약류 유품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재원이나 규격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대표적인 장구류 유품인 철모나 수통의 경우, 형태적

114) 황선익 외, 앞의 보고서, 2016, 41쪽.

1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2017, 161쪽, 191쪽.

116)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241-259쪽.

인 차이로 대략적인 국가 간의 피아식별이 가능하지만, 이 역시 노획의 가능성이 상존하기 때문에 단순히 장구류만으로 정확한 피아 식별이나 신원을 추정하기 어렵다. 하지만 장구류 유품의 경우 군장병들의 실제 사용하는 생활용품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장구류에 본인의 이름이나 주소 같은 신원 정보를 각인하거나 기재하는 사례가 종종 확인된다. 대표적으로 고 장복동 일병의 경우, <표 11>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강원도 홍천에서 유해가 발굴되었을 당시 인식표와 같은 신원확인이 가능한 단서를 지니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사진 5>와 같이 유해와 동반 출토된 수통에 새겨진 ‘張福東’ 전사자 본인의 이름을 확인하고 이를 토대로 전사자 정보를 추적하여 그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¹⁷⁾

6) 개인유품

<표 12> 한국군 전사자의 인식표 실제 출토 사례와 도면¹¹⁸⁾


계급/성명(소속)	실제 출토 인식표	인식표 도면
고 이등중사 김원갑 (육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대 한 0144435 KIM WON KAP 육 군 </div>
고 일병 김창현 (육군)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대 한 0184968 KIM CHANG HYON 육 군 AB </div>
고 하사 송덕이 (카투사)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border-radius: 15px; padding: 10px; text-align: center;"> K 1130456 </div>

117) 황선익 외, 앞의 보고서, 2016, 184쪽.

118)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8, 265쪽.

개인유품은 전사자가 지닌 개인적인 물품을 뜻한다. 온전히 해당 전사자 개인만을 위한 물건으로 모든 장병에게 공통으로 보급되었던 화기류, 장구류 등의 다른 유품과 차이점을 지닌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군이나 한국군 전사자의 유품 중 가장 정확한 신원 확인 근거가 될 수 있는 인식표이다.¹¹⁹⁾ 인식표는 군인이 전투 중 전사할 경우 군번이 찍힌 인식표를 해당 전사자가 항상 몸에 소지하게 함으로써 전사자 신원확인 근거를 남기는 것이 주목적이었다. 전사자 유해발굴시 전사자 유해와 유품인 인식표가 동반 출토된 경우, 인식표의 정보를 통해 확인된 전사자 유가족을 대상으로 DNA 검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빠른 신원확인이 가능하다. <표 12>와 같이 인식표의 형태와 찍힌 내용의 형식과 규격이 정해져 있으므로 한국군의 피아식별에 매우 중요한 근거가 된다. 또한 개인유품은 말 그대로 병사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개인적인 소지품 전부를 뜻하기 때문에 그 종류의 폭이 매우 다양하다. 인식표 이외의 전사자 유해발굴시 많이 출토되는 대표적인 개인유품으로는 도장과 만년필, 라이터, 훈장 등이 있다.

<표 13> 한국군 전사자 고 장대원 일병의 유품 발굴정보¹²⁰⁾


성명	전사일	발굴장소/전투	발굴일	동반 출토유품	실제 유품 사진(도장)
장대원	1951. 02.12	강원도 홍천 삼마치리 /형성전투	2010. 07.27	M1 실탄, M1 탄피, M1 탄클립, 카빈 탄피, 도장 , 반합뚜껑, 불명 플라스틱막대, 전투화 밑창, 전투화 각반	

119) 인식표도 화기류, 장구류나 마찬가지로 부대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보급한다는 측면에서 장구류로 구분할 수도 있겠으나 인식표의 정보는 한 사람 개인에게만 해당하는 정보이므로 개인유품으로 분류된 것으로 보인다.

120) 황선의 외, 앞의 보고서, 2016, 48쪽.

도장의 경우도 재질이 고무나 플라스틱이기 때문에 전사자 유해 발굴 지역에서 전사자의 개인유품으로 출토되는 경우가 많다. 도장은 전사자의 성명과 신분을 증명하는 개인유품으로써 전사자 유해와 도장이 동반 출토된 경우, 도장에 적힌 전사자의 성명과 인적사항을 추적하여 전사자의 신원확인의 단서로 활용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표 13>을 보면 알 수 있듯이 2010년에 강원도 홍천 삼마치리에서 발굴된 한국군 전사자 고 장대원 일병의 경우, 인식표가 따로 발굴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충청북도 괴산군 소수면 고마리’ 라고 적혀 있는 고 장대원 일병 명의의 도장이 출토됨으로써 이를 단서로 한국군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¹²¹⁾

<표 14> 한국군 전사자 고 최승갑 하사의 유품 발굴정보¹²²⁾

성명	전사일	발굴장소 /전투	발굴일	동반 출토유품	실제 유품 사진 (플라스틱 삼각자)
최승갑	1950. 08.23	다부동 369고지 /다부동 전투	2000. 04.21	나무도장, 플라스틱 삼각자 , 호루라기, 만년필, 수저, 라이터, 연필, 장화, 필름, 머리빗, 페니실린 약병, M1 실탄, 탄피, 장화	

앞서 언급하였듯이 개인유품은 전사자 개인이 소지하고 있는 모든 개인적인 유류품을 포함한다. 따라서 이제까지 언급된 화기류, 탄약류, 피복류, 군화류, 장구류처럼 공통으로 보급되는 것과는 달리 그 형태가 다양하다. 주로 생활용품인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규격이나 형태가 모두 제각각이기 때문에 단순히 개인유품만으로는

121) 한양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개교 72주년 기념 특별전 : 한국인과 인장』, 2011, 61쪽.

122) 황선익 외, 앞의 보고서, 2016, 38쪽;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유해발굴사업 13년의 기록』, 2013, 110쪽.

전사자의 피아구분이나 신원에 대한 근거를 찾기 쉽지 않다. 하지만 이전에 언급한 장구류의 사례와 같이 전사자 개인의 물건일 경우, 해당 개인유품에 전사자 본인의 신상정보를 기재하는 사례가 다른 종류의 유품들 보다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개인유품에 각인되거나 기재된 전사자의 개인정보가 전사자의 신원을 파악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 <표 14>의 고 최승갑 하사의 경우, 유해와 동반 출토된 플라스틱 재질의 삼각자에 새겨진 ‘崔承甲’의 이름을 통해 그의 병적기록을 확인, 뒤이어 유가족과 신속한 연락을 거쳐 DNA 유전자 감식을 통해 전사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최승갑 하사의 사례는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회에서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이 처음 시작된 이래 유품을 통한 전사자 신원확인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2003년 개봉한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의 모티브가 되어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을 대중적으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¹²³⁾

또한 고 최승갑 하사의 유해는 경상북도 칠곡군 다부동 369고지에서 발굴되었는데 병적 카드에 기록된 그의 소속은 한국군 제17연대였다. 하지만 낙동강 다부동 전투는 한국군 제1사단이 주 전선을 맡아 방어전을 수행한 전투로써 독립연대인 제17연대는 이 전투에 참여한 기록이 없다. 따라서 고 최승갑 하사는 부대가 재편성을 반복하는 가운데 제17연대에서 제1사단으로 편입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¹²⁴⁾ 이처럼 전사자 유품을 통해 신원확인이 이뤄지면서 전사자 유품이 6·25전쟁 당시 한국군의 급박한 부대 재편성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단서로써 활용될 수 있었다.

123)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109-110쪽.

124) 위의 책, 66쪽.

7) 전사자 유품의 사료적 한계와 가치

<사진 6> M1소총과 카빈소총으로 무장한 북한군 사진(충청남도 부여군)¹²⁵⁾



위와 같이 6·25전쟁 전사자 유품은 그 종류나 재질의 특성을 분석하여 전사자의 피아를 구분하거나 신원을 확인하는 데 매우 중요한 근거를 제공할 수 있다. 하지만 전사자 유품을 6·25전쟁 전사자를 규명하는 근거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쟁터에서 항시 상존하는 노획(鹵獲)의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병참 보급품에 대한 북한군의 노획은 6·25전쟁 발발 직후부터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6·25전쟁 이전 한국군은 인천에 피복창을 두고 서울에 보급창을 두어 피복류를 비롯한 각종 병참 보급품을 생산하였다. 특히 화기류의 경우 1948년 12월 15일 최초로 육군 병기공장을 창설하여 병기행정본부를 두는 한편, 제1, 2, 3공장을 설립하여 병기(兵器)의 대량생산 기반을 갖춰가고 있었다. 1950년 6월 15일에는 부산에 제1조병창을 창설하고 인천 제2공장을 제2조병

125) 이승용 개인소장, 「충남 부여군 해방 기념」 1950.8.15. 6·25전쟁 당시 사진자료를 통해 6·25전쟁을 연구하려는 시도 역시 활성화되고 있다.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사진자료』 제1-3권, 2016-2017; 정근식·강성현,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창으로 개편하기도 하였다.¹²⁶⁾

하지만 이 같은 군수보급 체계의 기반시설은 6·25전쟁 발발 3일 만에 서울을 잃으면서 대부분 상실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강 이북의 화기류와 피복류, 장구류를 비롯한 한국군 전체 병참 보급품의 70%가 유실되었다.¹²⁷⁾ 이후 한국군의 보급은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의 지원과 부산에 일부 남아있던 병참 기반시설을 확대하면서 점차 회복되었지만, 북한군은 서울에 남아있던 한국군의 화기류를 비롯한 군수물자를 노획하게 되었다. 이러한 북한군의 노획 상황은 당시 사진 자료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북한군이 충청남도 부여군에 진입 직후 찍은 것으로 판단되는 <사진 6>을 봤을 때, 북한군이 소지하고 있는 화기류를 분석해보면 북한군이 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소련제 모신나강 소총이나 슈파긴 기관단총 이외에도 미군과 한국군이 주로 사용했던 M1 소총과 카빈 소총을 소지한 북한군 병사들을 상당수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노획의 정황은 참전 생존 장병의 증언인 <A-2>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A-2>

“... 그런데 희뜩도 안하고 보더만은 분간을 못하니까. 왜 분간을 못하나 총도 우리총. 개들이 그당시 내려와가지고 없는 것이, 총도 우리 총. 모자도 구분이 안돼 인민군이 전부 우리것 다 뺏아가지고 이러논께 똑같애. 똑같애. 먼데서 바라보든. ...”¹²⁸⁾

126) 국방군사연구소, 앞의 책, 1997, 207-221쪽.

127) 위의 책, 223쪽.

128) 최태중·정맹규 구술, 김중군 외, 『한국전쟁 전투체험과 복진의 경험』, 『한국전쟁 이야기 집성』 2, (주)박이정, 2017, 222-223쪽.

<사진 7> 경북 영주 평은리 출토 버클¹²⁹⁾

(110725 영주 평은리 무명 427고지군 호165-유해1)



<사진 8> 조선민족청년단 훈련소

졸업증장¹³⁰⁾



주목할 부분은 <사진 6>과 같은 노획이 흔히 전쟁 후반에 자신들의 보급품이 부족할 때 대신 사용하는 부분적인 노획이 아닌, 개전이 2달도 채 안 된 시점에서 대량 노획을 통해 한국군의 화기류를 비롯한 각종 군용물품을 폭넓게 혼용하였다는 점이다. 결국 이러한 사실은 대부분의 6·25전쟁 전사자 유품이 사전에 노획하여 사용되었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사자 유품을 단독 근거로 삼아 전사자의 피아를 구분하거나 신원을 파악하는 것은 한계점이 존재하므로 유해발굴에 관련된 유가족 및 지역 주민의 증언과 해당 지역의 전투사 등 가능한 많은 단서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¹³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사자 유품이 극히 제한적인 참고자료의 역할만 갖는 것은 아니다.

2011년 7월 25일 경상북도 영주 평은리 무명 427고지군 165전투호에서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다. 이 유해에서 <사진

129)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2011년 전사자 특이유품 목록 (www.withcountry.mil.kr). 2022.01.06. 검색.

130) 수원박물관,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 해방공간 수원, 그 뜨거운 함성』, 2016, 218쪽.

131)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앞의 책, 2013, 238-239쪽.

7>과 같이 1개의 버클이 동반 출토되었는데 가운데에는 14개의 별이 원형을 감싼 무늬를 이루고 있으며 버클 양 끝 쪽에는 왼쪽부터 민족지상(民族至上), 국가지상(國家至上)이라는 문장이 표기되어 있다. 이 가운데의 별 문양, 그리고 민족지상, 국가지상의 구호는 독립운동가로서 대한민국 초대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지낸 이범석(李範奭)이 1946년 10월에 결성한 조선민족청년단(朝鮮民族靑年團), 일명 ‘족청’의 것이다. 이는 <사진 8>에 소개된 족청의 훈련소 졸업증장과 같이 비교하여 확인할 수 있다.

족청은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복군으로써 무장 독립운동을 벌이며 활약한 이범석의 주도하에 만들어진 청년 단체로써 그가 항일운동 시절 중국 국민당 중앙훈련단에서 훈련을 받으며 청년들의 훈련 중요성을 인식하고 광복 이후 청년들을 정신적, 육체적으로 교육할 목적으로 창단하였다. 족청은 여타 다른 청년단과 달리 ‘비정치’를 내세우며 ‘대공 투쟁’에 관여하지 않고 청년들에 대한 수련을 목표로 삼았는데, 이러한 방향이 당시 미군정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6개월마다 500만원의 정식 예산을 지원 받으며 급속도로 성장하게 되었다.¹³²⁾ 족청은 이처럼 자체적인 규약을 통해 대외적으로 ‘18세부터 30세까지 조선남녀 청년의 애국심 양양과 인격양성과 공민훈련’을 목표로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는 <B-3>, 족청의 현장을 보아도 알 수 있다.

<B-3>

가. 조선 청년의 민주주의 정신을 발휘하게 하여 건전한 신체와 활발한 정신과 선미(善美)한 도덕을 겸비함으로써 장래 조선 건설에 공헌함.

나. 진실한 조선 청년됨을 기함. 단, 비정치적, 비군사적,

132) 후지이 다케시, 「조선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의 설립과 운영」,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 해방공간 수원, 그 뜨거운 함성』, 2016, 256-257쪽.

비중과적으로 함.

다. 조선 청년의 민주주의 정신을 발양(發揚)하게 하며 조국을 위하여 희생적 분투로써 완전독립을 진취(戰取)하게 함.

라. 국제 친선과 세계 평화에 공헌함¹³³⁾

<사진 9> 1946년 5월 29일

중국 선양(瀋陽)의 국민정부 구호¹³⁴⁾



<사진 10> 수원의 조선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 전경¹³⁵⁾



족청의 훈련생은 기본적으로 공모로 모집되며 4주 동안 정치, 역사, 사회 교육과 각종 체력 훈련을 마치고 졸업했다. 위와 같은 규약과 훈련 내용으로만 보았을 때 족청은 단순한 청년조직이자 보이스카우트의 성격을 지닌다고 볼 수 있다.¹³⁶⁾ 하지만 위에 언급했던 것처럼 족청은 창단 초창기 미군정에 의한 지원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입장에 제약에 있었을 뿐 단순한 청년 단체는 아니었다. 이

133)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 8년사』, 역사비평사, 2012, 146쪽.

134) 후지이 다케시, 앞의 책, 2012, 148쪽.

135) 수원박물관, 앞의 도록, 2016, 222쪽.

136) 후지이 다케시, 『조선민족청년단 중앙훈련소의 설립과 운영』,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 해방공간 수원, 그 뜨거운 함성』, 2016, 257-259쪽.

러한 점은 <B-4>의 족청의 단지(團旨)를 통해서 그 실제 이념을 파악할 수 있다.

<B-4>

1. 우리는 민족정신을 환기하여 ‘민족지상 국가지상’의 이념하에 청년의 사명을 다할 것을 기함.
2. 우리는 종파를 초월하여 대내 자립 대외 공존의 정신하에 민족의 역량을 집결할 것을 기함.
3. 우리는 현실을 직시하여 원대한 곳에 착안하고 비근한 점에 착수하여 건국도상의 청년다운 순성(純誠)을 발일 것을 기함.¹³⁷⁾

이 대목에서 족청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민족지상 국가지상’의 이념이 등장한다. <사진 10>에서 보이는 것처럼 수원에 있었던 족청의 중앙훈련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이 구호는 <사진 9>와 비교하여 확인 할 수 있듯이 중국 국민정부가 내걸었던 ‘국가지상, 민족지상’의 구호 순서를 바꾼 것이다. 중국 국민정부와 달리 아직 정부수립이 되지 않았던 당시 국내 사정을 고려하여 우선 민족을 강조한 것이다.¹³⁸⁾ 이처럼 민족주의적 성격이 강하게 내제되었던 족청의 구성은 이준식(李俊植), 노태준(盧泰俊), 송면수(宋冕秀), 안춘생(安椿生), 장준하(張俊河)등 이범석과 같은 광복군 출신이 상당수를 이루었다.¹³⁹⁾ 이후 1949년 1월 7일, 수도여단의 전신인 한국군 제7여단의 여단장에 이준식이 임명되는 등 한국군 내에서도 족청 출신 인물들이 상당수 기용되기 시작하였다.¹⁴⁰⁾ 이

137) 후지이 다케시, 앞의 책, 2012, 147쪽.

138) 위의 책, 147쪽.

139) 위의 책, 107-122쪽.

러한 족청은 강력한 우익청년단체를 만들고자 하는 이승만 정부의 의지 아래 1949년 1월 20일에 해산하여 대한청년단으로 통합되었다.¹⁴¹⁾ 하지만 해산 뒤에도 족청 출신 인사들은 대한민국 정부 부처와 국회, 군대 등에 진출하여 소위 ‘족청계’라는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러한 족청의 성격을 살펴봤을 때 <사진 7>의 족청 소속의 버클은 상징적인 의미를 지닌다. 우선, 족청의 대표적인 이념인 ‘민족지상, 국가지상’이 정확히 각인되어 있으며 이 버클을 소지한 6·25전쟁 전사자의 유해가 경북의 대표적인 주요 전투지역 중 하나였던 영주 일대에서 발굴되었다. 해당 전사자의 유해가 발굴된 2011년, 경북 영주 지역에서는 한국군 8구, 북한군 13구 등 총 21구의 유해를 발굴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¹⁴²⁾ 현재 해당 전사자 유해의 한국군 판정 여부는 정확히 확인할 수 없으나 만약 해당 유해가 한국군으로 판명된다면 한국군 내에 족청계의 영향력을 직접 확인시켜 주는 하나의 실질적인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6·25전쟁 당시의 족청계 유물의 발굴은 그 자체로 전사자의 피아구분의 역할을 넘어서 1950년대 족청계의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사료인 것이다. 위와 같이 전사자 유품은 단순히 전사자의 피아구분 및 신원확인의 보조적인 참고자료의 역할뿐만 아니라 1950년대 6·25전쟁기의 시대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하나의 사료로써 가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6·25전쟁 전사자 유품의 폭넓은 조사와 연구가 요구된다.

140) 이러한 한국군 내 광복군-족청 계열을 한국군 정훈(政訓) 도입의 주체로 보는 연구 또한 존재한다. 김지훈, 「창군기 한국군 정훈의 도입 과정과 중국국민당 정공의 변용」, 『역사와 현실』 제104호, 2017.

141) 후지이 다케시, 앞의 책, 2012, 216-219쪽.

142)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홈페이지, 2011년도 지역별 발굴실적(www.withcountry.mil.kr). 2021.12.31. 검색

4. 맺음말

전쟁의 직접적인 수행자인 동시에 가장 큰 피해자였던 6·25전쟁 전사자에 관해 본 연구에서는 6·25전쟁 전사자의 발생과 수습의 전개 과정을 파악하는 한편,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에 주목하여 지역별 전사자의 유해와 유품, 이 두 가지 요소가 모두 역사적인 사료로써 가치를 가지고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혀냈다. 현재까지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군은 6·25전쟁 이전에 전사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충단 공원에 안치하도록 조치하였으나 개전 3일 만에 서울이 함락당함으로써 종전의 임시적인 전사자 수습체계마저 무너지게 되었다. 이후 한국군은 1950년 9월이 되어서야 묘지등록대와 영현중대 등을 편성하면서 전사자 수습을 시작하였으나 시급한 전투지역에서의 임시매장과 화장 처리에 주로 집중하였을 뿐 6·25전쟁 전사자 유해를 수습하기 위한 본격적인 조치는 아니었다.

이후 1953년 7월 27일 휴전이 이루어지자 6·25전쟁 전사자는 구체적인 정전협정에 근거하여 수습되기 시작하였다. 정전협정에서 정한 전사자 수습의 양해 시점이 종료된 이후 전사자 문제는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다가 유해가 발견되면 다시 협의를 거쳐 송환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1996년부터 미국과 북한을 중심으로 전사자 유해발굴과 송환이 이루어졌다.

한편, 정전협정 이후 주목받지 못했던 6·25전쟁 전사자 문제에 대해 국내적으로 관심을 모았던 계기는 2000년 6·25전쟁 50주년을 맞아 한시적인 사업으로 시작했던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이었다. 전사자의 유해가 대대적으로 발굴되고 일부 한국군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되는 성과가 나타나자 전사자 유해발굴사업은 국

민적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그 결과, 전담 기구인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이 창설되고 국가영구사업으로 지속하게 되었다.

경상북도 지역은 한국군이 소백산맥 일대의 지연전을 거쳐 유엔군과 함께 낙동강 전선에서 방어전을 수행하며 반격의 발판을 만들어낸 곳이다. 이러한 경북의 주요 전투지역에서 한국군 전사자 유해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본 결과 문경, 풍기, 안동, 의성, 영천, 칠곡(다부동), 영덕, 포항 등 기존 전투사에 기록된 격전지에서 상당수의 6·25전쟁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포항과 영천 지역의 경우 기존에 알려졌던 전사자 규모보다 더 많은 수의 전사자 유해가 발굴되어 기존의 6·25전쟁 전투사를 재확인하는 새로운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

6·25전쟁 전사자의 유품은 말 그대로 전사자가 소지하고 있던 유류품을 뜻한다. 그 종류에 따라 화기류, 탄약류, 피복류, 군화류, 장구류, 개인유품 등으로 구분되는데 이러한 유품들은 종류별로 특징을 분석하여 전사자의 국적, 즉 피아(彼我)식별에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한 핵심적인 근거자료로 활용된다.

그러나 6·25전쟁 발발 직후 피복창과 보급창 그리고 조병창 등이 소재하고 있던 서울과 인천의 상실로 인해 한국군 병참 보급품의 70%가 유실되었다. 그 결과, 한국군 전사자 유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병참 보급품을 북한군이 대량 노획(鹵獲)하여 혼용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전사자 유품의 사료적 활용에 한계점으로 남게 되었다.

하지만 2011년 영주 평은리에서 전사자 유해와 동반 출토된 버클을 분석하던 중 버클에 새겨진 민족지상(民族至上), 국가지상(國家至上)의 문장 등을 근거로 해당 버클이 조선민족청년단(족청)의 것임을 밝혀냈다. 이에 따라 1950년대 당시 한국군 내에서 광범위하게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소위 ‘족청계’의 움직임을 실질적으로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전사자 유해와 유품에 대한 정보는 다양한 분석을 통해 사료적 활용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그동안 단순히 추모의 대상으로만 해석되어왔던 6·25전쟁 전사자에 대해 더욱더 실증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하지만 한국현대사 속에서 6·25전쟁 전사자라는 주제를 모두 담아내기에는 본 연구가 가진 한계점이 상당수 존재한다. 우선 한반도 전 지역에서 벌어진 6·25전쟁의 다양한 국면을 담아내기에는 1차 사료 수집에 한계가 있었다. 그러므로 경북지역을 제외한 타 지역의 전사자 유해 분포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투 양상에 따라 얼마든지 본 연구와 다른 결론과 해석이 존재할 수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 본 연구는 6·25전쟁 전사자에 대한 심층적인 삶과 당시 전투상황을 유추할 수 있는 증언(證言)을 포함한 구술 자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6·25전쟁 생존 장병이나 유가족 그리고 전투지역 내 주민들의 증언은 6·25전쟁 전사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할 6·25전쟁 전사자의 지속적인 후속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부록] 6·25전쟁 전사자 유해발굴 현황 (2020.12.31.기준)¹⁴³⁾

구 분	계	아 군			적 군		
		소계	한국군	UN군	소계	북한군	중공군
총계	12,592	10,967	10,942	24	1,625	744	881
2000년	345	334	333	1	11	10	1
2001년	211	202	199	3	9	8	1
2002년	226	165	164	1	61	54	7
2003년	170	118	118	0	52	23	29
2004년	173	138	138	0	35	22	13
2005년	203	141	138	3	62	25	37
2006년	175	92	92	0	83	75	8
2007년	534	378	378	0	156	122	34
2008년	837	673	673	0	164	83	81
2009년	1,279	1,140	1,138	2	139	67	72
2010년	1,438	1,326	1,325	1	112	65	47
2011년	1,388	1,302	1,301	1	86	43	43
2012년	1,040	990	986	4	50	20	30
2013년	737	672	671	1	65	31	34
2014년	914	810	810	0	104	36	68
2015년	623	564	561	3	59	22	37
2016년	435	394	392	1	41	9	32
2017년	435	409	407	2	26	8	18
2018년	357	343	343	0	14	2	12
2019년	558	384	383	1	174	5	169
2020년	514	392	392	0	122	14	108

* 정밀감식 이후 피·아 및 개체 수 변동 가능

143) 본 통계는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유해발굴 20년사』, 2021, 18쪽에도 수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1. 자료집 및 연구보고서

육군본부, 『육군병참사』 제1집, 1969.

합참정보본부, 『군사정전위원회편람』 제5-8집, 2001-2010.

국사편찬위원회, 『국사편찬위원회 수집 사진자료』 제1-3권, 2016-2017.

<http://uci.or.kr//G901:A-0007889649@N2M>

국방군사연구소, 『한국전쟁지원사』, 1997.

<http://uci.or.kr//G500:1310377-00000000164009@N2M>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6·25전쟁사』 1-11권, 2003-2013.

_____, 『6·25전쟁 유해소재 지도(DMZ/남한지역)』, 2009.

<http://uci.or.kr//G500:1310377-02012014019554@N2M>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그들을 조국의 품으로 :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13년의 기록』, 2013.

<http://uci.or.kr//G901:A-0007155484@N2M>

_____, 『6·25전사자 유품자료집』, Vol.2, 2018.

_____, 『6·25전사자 유품자료집』, Vol.3, 2020.

_____, 『유해발굴 20년사』, 2021.

<https://doi.org/10.978.8997748/501>

박동찬, 『통계로 본 6·25전쟁』,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 2014.

<http://uci.or.kr//G901:A-0006528781@N2M>

양영조 외, 『근현대문화유산 6·25 전쟁(한국전쟁)분야 목록화 조사 최종 보고서』, 문화재청, 2020.

황선익 외, 『국군 유해발굴 관련 전시콘텐츠 구성 연구용역 최종보고서』, 고려대학교 한국사연구소, 2016.

2. 단행본

- 강인철, 『전쟁과 희생 : 한국의 전사자 숭배』, 역사비평사, 2019.
<http://uci.or.kr//G901:A-0009292111@N2M>
- 김귀옥 외, 『한국전쟁 이야기 집성』 1·2권, (주)박이정, 2017.
- 김보영, 『전쟁과 휴전 : 휴전회담기록으로 읽는 한국전쟁』, 한양대학교 출판부, 2016.
<http://uci.or.kr//G901:A-0006612582@N2M>
- 노용석, 『국가폭력과 유해발굴의 사회문화사』, 산지니, 2018.
- 다카하시 데쓰야, 『국가와 희생』, 책과함께, 2008.
- 백선엽, 『길고 긴 여름날 1950년 6월 25일』, 지구촌, 1999.
- 전진성 외, 『기억과 전쟁 : 미화와 추모 사이에서』, 휴머니스트, 2009.
- 정근식·강성현, 『한국전쟁 사진의 역사사회학 : 미군 사진부대의 활동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출판부, 2016.
<http://uci.or.kr//G901:A-0006606053@N2M>
- 정병준, 『한국전쟁 : 38선 충돌과 전쟁의 형성』, 돌베개, 2006.
<http://uci.or.kr//G901:A-0006119246@N2M>
- 하상복, 『죽은 자의 정치학 : 프랑스·미국·한국 국립묘지의 탄생과 진화』, 모티브북, 2014.
<http://uci.or.kr//G901:A-0006468651@N2M>
- 후지이 다케시, 『파시즘과 제3세계주의 사이에서 : 족청계의 형성과 몰락을 통해 본 해방 8년사』, 역사비평사, 2012.
<http://uci.or.kr//G901:A-0006417426@N2M>

3. 논문

- 고한빈, 「한국전쟁 이전(1946-50) 한국군 군사교범의 성격」, 한양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2017.
- 김성보, 「한국전쟁기 전사자 유해발굴의 의의와 전쟁사 연구의 과제」,

『중원문화연구총서』 6, 2002.

<http://uci.or.kr//G901:A-0002007430@N2M>

김수자, 「제1공화국 시기 장충단공원의 정체성의 변형 과정」, 『한국문화연구』 제34호, 2018.

<http://doi.org/10.17792/kcs.2018.34..279>

김태산·김희동, 「군부대 문화재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연구」, 『군사과학논집』 제69권 1호, 공군사관학교, 2018.

<http://uci.or.kr//I410-ECN-0102-2018-000-003951238@N2M>

김태우, 「한국전쟁 연구 동향의 변화와 과제 1950~2015」, 『한국사학사학보』 제32호, 2015.

<http://uci.or.kr//G704-001549.2015..32.007>

노영기, 「1948-50 한국군의 형성과 성격」,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2008.

박선주, 「6·25전사자 유해발굴조사 ; 6·25 전사자유해의 인류학적 조사 : 2000~2002년도 발굴을 중심으로」, 『중원문화연구총서』 6, 2002.

<http://uci.or.kr//I410-ECN-0102-2009-910-002353381@N2M>

_____, 「6·25 전사자유해 발굴의 의의와 현황」, 『인문학지』 33, 충북대학교 인문학연구소, 2006.

박중섭, 「한국전쟁 사망군인 유해발굴의 인도법적 의의」, 『人道法論叢』 제26호, 대한적십자사 인도법연구소, 2006.

박종철, 「미·북 군사회담과 한국의 대응방향」, 『통일문제연구』, 제5권, 1996.

서주석, 「미국의 대북한 포로 및 유해 송환 정책」, 『군사』 제35호, 1997.

<http://uci.or.kr//G901:A-0001196355@N2M>

이남우, 「전시체제의 한국군 상·장례 절차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장례문화학과 석사학위논문, 2004.

이상호, 「베트남전쟁 파병 국군 전사자 현황과 국내 언론 보도」, 『역사와 현실』 제116호, 2020.

<http://doi.org/10.35865/YWH.2020.06.116.103>

4. 박물관 발간 전시도록 및 자료집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 공동 기획전 : 67년만의 귀향』, 2017.

<http://uci.or.kr//G500:1310377-02012044245716@N2M>

_____, 『박물관 근현대자료의 등록과 관리』, 2018.

<http://uci.or.kr//G500:1310377-02012048348124@N2M>

_____, 『6·25전쟁 70주년 특별전 : 녹슨 철망을 거두고』, 2020.

수원박물관, 『수원박물관 특별기획전 : 해방공간 수원, 그 뜨거운 함성』, 2016.

<http://uci.or.kr//G500:1310377-02012039126834@N2M>

한양대학교 박물관, 『한양대학교 박물관 개교 72주년 기념 특별전 : 한국인과 인장』, 2011.

<http://uci.or.kr//G901:A-0006476183@N2M>

5. 신문 및 기타

《국방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https://stdict.korean.go.kr/main/main.do>)

국방부 유해발굴감식단(www.withcountry.mil.kr)

국방부 군사편찬연구소(www.imhc.mil.kr)

대한민국 정책프리핑(www.korea.kr/main.do)

『한국근현대사사전』, 한국사사전편찬회, 2005.

(Abstract)

The Review of Historical Value for the Excavation of those who Killed in Battle and their Remains during the Korean War

Ko, Jong-sung

This study inquires if the remains and their leftover objects collected by an excavation of the Korean War fallen could be used as essential historical source for the research of Korean War history. The fallen who were dead in the middle of battle did not receive any proper attention from existing studies. Along with the excavation which has been conducted as the 50th anniversary commemorative project of the Korean War, the objects left over by the fallen began to get spotlighted for the first time. The Korean armed forces confronted the outbreak of war in the absence of experience and a record system, especially the case of the war fallen. The outcome of this excavation in the current situation is the critical source for an empirical understanding of the existence of the Korean War fallen.

North-Gyeongsang Province is the area where the sacrifice of the Korean soldiers eventually got the opportunity for counterattack: the defense line of the Nakdong River had been built there in alliance with the military forces of United Nations by a delaying action throughout the region of Sobaek Mountains. The distribution of the Korean War fallen in the major battlefields of Gyeongsangbukdo shows that in the battlefields such as Punggi, Andong, Mungyeong, Yeongdeok, Uiseong, and Chilgok, which had been recorded in the existing research of war history, a significant number of the fallen were excavated. Moreover, the excavated number of the fallen in the battlefields of Pohang and Yeongcheon exceeds the previously expected scale, which makes a new base to re-confirm the existing studies of the Korean War history.

The objects excavated with the Korean War can be classified by types

as weapon, ammunition, clothing, military boots, equipment, and personal belongings. These are used as an essential material for identification: successfully analyzing the properties of objects by types can identify the nationality of the deceased person, i.e., to distinguish whether they are friendly or foe.

In conclusion, information on the remains and the objects of the Korean War fallen obtained by excavation can be used as historical source through the various ways of analysis. This allows a more empirical approach to the Korean War fallen who had been left just as an object of simple commemoration.

Keywords : the Korean War, the war fallen, excavation of the fallen, the remains of the fallen, the objects of the fallen,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Agency for KIA Recovery and Identification (MAKRI), Republic of Korea Army